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세미나

# 2023년 미중역학관계 한반도와 대만해협의 위기관리 방향 모색

2023. 1. 16.(월) | 13:30~17:00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 / 온라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 본 자료집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및 각 집필자 소속기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함.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세미나

## 2023년 미중역학관계: 한반도와 대만해협의 위기관리 방향 모색

- 사 회 : 이 관 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 발 표 : 문 흥 호 (한양대 교수)  
박 한 진 (중국경제관측연구소장)  
장 영 희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연구교수)  
조 현 규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
- 토 론 : 강 준 영 (한국외대 교수)  
박 상 수 (충북대 교수)  
공 유 식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이 상 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센터장)
- 일 시 : 2023년 1월 16일(월), 13:30~17:00
- 장 소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1층)/온라인





---

# 목차

## 정치

- 【발표】 시진핑 집권 3기, 대만해협·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문흥호(한양대 교수) / 3
- 【토론】 강준영(한국외대 교수) / 19

## 경제

- 【발표】 경제안보와 대만과 한국기업의 활로: 대립 혹은 상생  
박한진(중국경제관측연구소장) / 27
  - 【토론】 박상수(충북대 교수) / 41
-

---

## 외교

【발표】 시진핑 3기의 양안관계 전망과 한반도와의 상관성  
장영희(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연구교수) / 49

【토론】 공유식(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69

## 군사

【발표】 대만해협 충돌 위기와 對 한반도 안보 영향  
조현규(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 / 75

【토론】 이상만(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센터장) / 95

---

# 정치

## 발표

문흥호(한양대 교수)

## 토론

강준영(한국외대 교수)



발표

# 시진핑 집권 3기, 대만해협·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문흥호(한양대 교수)

## 1. 문제 제기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확정된 시진핑의 장기집권 구도는 중국의 현재, 미래와 관련된 많은 문제를 제기한다. 그중에서도 미중 패권경쟁과 불가분의 관계인 대만해협의 전쟁과 평화, 양안의 통일과 독립 문제는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시진핑 집권 2기는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과 대만문제의 전략적 전환에 대한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수세적 입장을 견지했다. 과격한 표현으로 미국을 비난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 애국주의, 민족주의를 고양시켜 자신의 장기집권을 정당화하려는 속셈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진저리쳤던 제국주의의 잔재라고 정의된 '부당한' 내정 간섭은 중국의 내부 통제와 권력 기반 강화에 최상의 자원이다.

그렇다면 이미 안착한 장기집권의 권좌 위에서 시진핑은 대만문제, 양안의 통일과 독립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어떠한 정책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응한 미국의 전략적 판단은 어떠한 것인가? 중국과 미국의 틈바구니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우려하는 대만의 가능한 선택지는 무엇인가? 대만 못지않게 미국, 중국과 얽혀있는 한국은 무

사태평할 수 있나?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은 한반도와 무관한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의 네 개 의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첫째, 미국이 원하는 대만의 미래상에 관한 것이다. 즉 미국이 진정 대만의 독립을 원하는지 아니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만 잔존하기를 바라는지에 따라 대만문제의 향배가 달라질 것이다. 둘째, 시진핑이 대만문제의 해결방식으로 ‘일국양제’ 통일방안을 고수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의 무력 진압과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일국양제의 핵심인 ‘고도자치(高度自治)’가 이미 회복 불가의 심한 상처를 입었지만, 시진핑이 이 간판을 계속 내세울지 여부는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 예측에 매우 중요하다. 셋째, 양안의 통일과 독립에 있어서 시간은 과연 누구의 편인가에 관한 것이다. 양안의 ‘통독문제(統獨問題)’는 최고지도자의 결단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며 시진핑도 예외일 수 없다. 넷째, 대만해협과 한반도의 안보적 상호연계성에 관한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과 중국은 두 지역 안보 상황의 결정적 요인이다.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북중관계는 이미 과거의 혈맹 차원으로 회귀하고 있으며 최근 북한의 잦은 무력 시위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선 대만해협이 한국에겐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이유다.

## 2. 미국, 대만의 독립을 원하는가?

미국의 대중전략과 대만정책, 양안관계는 상호 연동되어 있다. 미국의 대중전략이 바뀌면 대만정책도 여지없이 변화하며 결국은 양안관계

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전략적 변화는 중국에 대한 실망과 당혹감에 기인한다. 미국은 지난 40여 년의 '건설적 개입(constructive engagement)'을 통해 중국의 개혁개방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고 많은 문제에 눈감아 주었다. 그러나 지금의 중국은 미국의 기대와 너무도 다른 모습이며 수수방관할 수 없는 제어의 대상이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 발표된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NSS)'는 중국을 국제질서 재편 '의지와 능력'이 있는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하고 이를 억제하는 것이 매우 절박한(urgent)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적 다원화가 철저히 무시된 채 오로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중국몽(中國夢)'의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헌법 수정과 3연임을 통해 장기 집권체제를 구축한 시진핑의 중국은 더 이상 전략적 협력자가 될 수 없다. 미국이 전정부적(whole-of-government) 차원의 대중국정책을 수립하고 그 핵심인 대만정책을 서둘러 재편하는 이유다.

우선 미국은 수교 당시 대만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던 중국의 약속을 더 이상 믿지 않으며 중국의 약속 불이행과 고의적인 사실 왜곡을 비난한다. 이는 미국이 미중관계의 기본 문서인 '3개 공동성명'의 대만 관련 합의를 철저히 재적용할 것임을 의미한다. 특히 미국은 1972년의 '상해공동성명'과 1979년의 '수교공동성명'이 명시한 "양국 이익과 세계평화 증진" 합의를 중국이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대만에 대한 방어용 무기 제공" 등을 명시한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에 의거하여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무기 판매를 맹비난하는 중국에 대해 1982년 8월 당시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의 메모와 비밀 외교전문(cable)까지 공개하면서 첫째,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축소는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the peaceful solution of the Taiwan-PRC differences)'에 대한 중국의 약속 이행과 확고히 결부되어 있으며(conditioned

absolutely), 둘째, 대만에 제공할 ‘무기의 질과 양(the quality and quantity of arms)’은 전적으로 중국의 위협 여하에 달려 있다(be conditioned entirely on the threat posed by the PRC)고 반박한다.

이처럼 미국은 대만과의 관계를 미중관계의 ‘일부분(subset)’이 아닌 독립적 관계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실제로 미국은 그동안 자제했던 대만과의 정치교류를 확대하는 동시에 ‘타이페이법(TAIPEI Act)’ 등을 통해 대만의 국제무대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다자적인 가치·이념·기술 동맹으로 대중 압박전선을 확대하면서 대만을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로 지칭한다. 대만정책도 더 이상 비정치·민간차원에만 머물지 않으며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 등 미국의 의회, 정부 고위지도부가 빈번하게 대만을 방문하고 있다. 2022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반중, 친대만 입장을 공공연하게 표방 해온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 공화당 원내대표가 신임 하원의장이 되면 미국 의회의 친대만 움직임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백악관 안보보좌관 설리반(Jake Sullivan)도 향후 중국과의 정상회담 등 주요 논의 내용을 대만에 통보해 줄 것이란 점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만정책 변화는 여전히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우선 미국의 대만정책 조정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중국 정책(one-China policy)’ 범위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11월 14일 시진핑 주석과의 인도네시아 발리 정상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이 지속될 것임을 약속하는 동시에 중국이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대만을 위협함으로써 대만해협과 주변 지역의 평화·안정이 훼손되어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 대만 양측에 의한 양안관계의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도 반대한다(opposes any unilateral changes to the status quo by either side)’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의 강압적 통일 시도는 물론 대만독립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한편 미국의 의지와 별개로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공격을 제압할 미국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 최근 대만해협의 미중 군사 충돌을 상정한 미국 내 각종 '워 게임(war game)'에선 미국이 패하는 결과도 도출되기도 했다. 현실적으로 과거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가 상대적 우위로 바뀐 상황에서 미국이 선불리 대만독립 지원전쟁을 감행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이 대만문제를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 차원에서만 인식할 뿐 군사적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만의 독립을 지원할 '의지'와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시진핑 집권 3기의 미중관계 향배가 대만문제의 변화 범위와 내용을 규정할 것이다. 미국의 대중정책은 모든 분야에서의 압박 일변도가 아니며 협력·경쟁·대결의 복합전략을 구사한다. 이 중에서 대만문제는 분명히 참여한 대결영역이며 단기간 내에 완화될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최종 목표는 대만독립이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패권을 넘보는 중국을 제어하기 위해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 대만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적어도 현 단계에서 미국이 대만의 독립 성향을 부추겨 과도하게 중국을 자극할 이유가 없다. 대만도 미국의 이러한 속내를 모르지 않으며 자신들의 미래를 미국에만 맡길 수 없다는 내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대만에 과연 어떠한 이득을 가져다주었는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제기되었다. 결국 미국이 원하는 대만은 독립된 주권 국가가 아니다. 또한 미국은 민진당이 참패한 11월 26일 대만 지방선거의 의미를 면밀히 분석할 것이다. 미국의 대만정책은 대만이 아닌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며, 이는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 3. 시진핑, ‘일국양제’를 고수할 것인가?

대만문제가 미국에겐 전략적 카드지만 중국에겐 반드시 사수해야 할 민족적 과제다. 더구나 중국이 표방하는 ‘신시대’의 이념·정치·경제·안보를 독점 설계, 추진하는 시진핑의 정치적 미래는 대만문제의 향배와 무관하지 않다. 중국몽 실현의 핵심적인 부분인 민족통합의 성과 없이는 시진핑의 어떠한 치적도 빛을 잃을 것이다. 대만과 마주한 양안교류의 전진기지인 복건성에서 무려 17년을 근무한 시진핑은 대만문제와 양안관계의 복잡다단한 구조적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가 대만문제의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바이든의 계산된 친대만 행보와 내정 간섭에 더욱 분노하는 이유다.

시진핑의 강경한 입장은 20차 당대회 정치보고에서도 잘 나타난다. 여기에서 시진핑은 ‘대만동포에게 보내는 글(告臺灣同胞書)’ 발표 40주년 기념 연설(2019),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연설(2021), 1993년과 2000년에 이은 세 번째의 ‘대만백서’(2022)에서 제시된 각종 정책을 종합하여 대만문제 해결을 위한 ‘총체적 방침(總體方略)’과 대만에 대한 대정방침(大政方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전략적 전환에 기대어 대만독립을 도모하려는 독립주의자들과 이들과 연계된 외부세력들에 대한 강한 반감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대만은 중국의 대만이고 대만문제 해결은 중국인들의 일이며, 따라서 반드시 중국인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해 성의를 다하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지만 무력사용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모든 선택지를 유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헌법의 연임제한 규정까지 삭제하고 결국 20차 당대회를 통해 장기집권의 권력구도를 확립했지만, 시진핑에게 대만문제는 여전히 국내외를 통틀어 가장 민감한 사안이며 양보할 수 없는 지상과제다. 그

러나 중국을 괴롭히면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頭破血流)’이라는 시진핑의 살벌한 경고가 당장 전쟁으로 비화되기는 쉽지 않다. 미국의 군사력엔 여전히 역부족이며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을 규합하고 있다. 특히 미중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던 유럽연합이 중국을 비난하며 미국과 의기투합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유럽연합의 반중정서 확산과 대만과의 교류 증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한 시진핑은 푸틴의 전쟁 도발로 미국의 대중공세가 약화되기를 내심 기대했지만 점차 ‘전범’으로 몰리는 듯한 푸틴을 더 이상 두둔하기 힘든 상황이다. 발리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야만적인 전쟁(brutal war)’이라고 맹비난하는 바이든에 적극 동조하지는 못했지만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의 공동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중국이 정면으로 푸틴을 비난하지는 못하지만 사안에 따라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에 거리를 둘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국내의 현실에서 시진핑이 대만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반복적으로 강조할 수밖에 없지만, 그가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통일과 독립을 양극단으로 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취할 것이다.

첫째, 핵심 이익의 상징인 대만문제가 협상·타협·양보의 대상이 아니라는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만의 이탈 조짐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세 개입에 경고성 무력 시위를 지속할 것이다. 이는 국내의 애국주의 분위기를 확산과 내부 통제를 위해서도 유용하다.

둘째, 전면 단절이 어려운 양안 경제교류, 인적교류의 현실을 고려하여 대만을 향한 유인책을 확대할 것이다. 최근 중국은 무력 시위의 다른 한편에서 양안의 ‘융합발전’을 명목으로 다양한 경제협력 구상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선량한 ‘대만동포’와 ‘독립세력’을 철저히 구분하여

당근과 채찍의 이중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는 싫든 좋든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대만 경제계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시진핑은 민진당의 11월 26일 지방선거 패배와 장제스(蔣介石) 증손자 장완안(蔣萬安)의 타이베이 시장 당선에서 나타난 대만 내 여론 추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압박과 회유의 이중적 대만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구사할 것이다.

셋째, 대만문제의 현실적 해법으로 일국양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비록 홍콩 민주화 시위의 무력 진압과 보안법(國安法) 강행으로 덩샤오핑이 약속했던 일국양제의 빛이 크게 바랬지만 ‘고도자치(高度自治)’로 분장된 일국양제의 간판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중국이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최상의 통일실현 방안이자 양안 동포와 중화민족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서 일국양제를 계속 유지할 것임을 의미한다. 실제로 양안관계와 관련된 시진핑의 각종 발언 과정에서 일국양제는 여전히 ‘중화민족의 지혜(中華智慧)’가 응집된 중국사회주의의 위대한 ‘창조적 시도(創舉)’로 강조되고 있다. 물론 시진핑의 자제력은 대만 민진당 정권의 독립 분위기와 미국, 일본의 개입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중국이 대만의 독립 선언, 노골적인 외세 개입을 대만문제의 ‘레드 라인’으로 설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 4. 통일과 독립, 시간은 누구의 편인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중국 지도부는 물론 민진당 내에서도 자타가 공인하는 골수 대만독립주의자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의 미래를 좌우하는 현실에 분노하고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의 처지를 벗어나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 군복차림으로 군함과 전투기에 올라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소리치기도 한다. 2023년 1월 1일 신년사(新年談話)에서도 4개월로 축소된 군복무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등 병력 구조조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강대국 간 이권 다툼의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약소국 지도자로서의 당연한 결기 표현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차이 총통은 냉철한 현실주의자다. 자주·독립을 향한 감성적 접근과 무모한 시도가 초래할 부정적인 결과도 잘 알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한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대면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만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해야 한다.

우선 미국과의 관계 발전을 통해 외해 직전인 외교적 ‘생존공간’ 확장에 주력할 것이다. 최근 대만은 미국과의 가치동맹, 국제사회의 반중 정서 확산을 계기로 중국의 공산주의와 대비되는 대만의 자유민주주의를 부각시키고 있다. 실제로 리투아니아, 프랑스, 체코 등 유럽연합 국가들과의 실질적 관계 발전 성과를 얻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 국가들의 의회 대표단이 대만과의 교류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지원이 당장 대만의 공적 외교영역을 확장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미국의 의지도 문제지만 이를 모질게 저지하는 중국의 힘은 넘기 힘든 철벽이다. 세계보건총회(WHA) 옵서버 자격 취득에 번번이 실패하면서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에 좌절했다. 그러나 숨 쉴 공간이 거의 소진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차이 총통의 시도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기댈 곳은 미국뿐이다.

한편 첨예한 정치적 대립 속에서도 윈-윈의 경계를 무단히 확장해 온 ‘특수한’ 양안관계의 안정적 관리 역시 차이 정부의 핵심 과제다. 그동안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과 민간교류는 명실공히 ‘하나의 중국’에 근접했으며 통일과 독립을 둘러싼 대립과 반목을 무색하게 했다. 심

지어 인적교류가 단절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안교역은 크게 증가했다. 대만이 중국을 떠나 새로운 교역·투자 대상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겨냥한 ‘남향정책’은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보다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정신적 다짐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양안교류는 결혼, 취업, 이주, 유학 등을 통해 대다수 대만 주민의 가정과 실생활에 이미 깊숙이 스며들었다. 이는 현 단계의 양안관계를 단순히 통일과 독립의 문제로 단순화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다. 시진핑조차 버거워하는 강골 차이잉원이지만 분노를 삭이며 미우나 고우나 양안교류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대다수 대만인들에게 양안관계는 체제·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면 실패는 예정된 것이다. 11월 26일 민진당의 지방선거 패배와 차이잉원의 민진당 주석 전격 사퇴는 양안관계의 이러한 성격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미중 패권경쟁의 최전선인 대만해협에는 전쟁과 평화의 요인이 병존한다. 중국이 빛을 가리고 힘을 기르는 동안 대만해협은 양안의 교류협력을 위한 평화적 공간이었다. 더 이상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의 해 묶은 싸움터가 아니었다. 그러나 증강된 ‘종합국력’에 기대어 ‘신형 대국관계’를 주장하며 덤벼드는 중국에 놀란 미국이 대만정책을 재조정하면서 대만해협은 미중 패권경쟁의 최전선으로 변했다. 미국은 중국의 위장된 평화 전술에 속았다는 인식이 강하고, 중국은 미국이 타국의 주권·영토를 무시하던 제국주의 시절의 고질이 재발했다고 분개한다. 그들의 인식이 어떠한든 미중 대립의 본질은 ‘핵심 이익’의 수호와 확장을 위한 패권 경쟁이며 그 과정에서 대만의 미래를 볼모로 잡고 있다.

그렇다면 점점 고조되는 미중의 패권 다툼이 결국 대만해협의 전쟁을 유발할 것인가. 결론은 적어도 단기적으로 그러한 가능성이 높지 않

다는 것이다. 미국, 중국, 대만 모두 예측 불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군사적 충돌을 감행할 이유가 없다. 특히 중국은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수단만으로도 대만의 독립 분위기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미국 역시 군사행동이 불가피할 정도까지 시진핑을 자극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입장은 발리 미중 정상회담에서 잘 나타났다. 미중 양국은 경쟁과 대립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기본적인 소통과 ‘위기관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미국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단호히 반대했지만 양안관계의 현상유지 필요성에 방점을 두었다. 물론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미중 패권경쟁의 대결 강도에 따라 대만해협의 전쟁과 평화가 심한 기복을 보일 가능성은 상존한다.

차이잉원 민진당 정부 역시 홍콩 사태 이후 일국양제의 허상을 재확인했고 이에 대한 기대를 모두 버렸지만, 중국과의 모든 대화 창구를 폐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기에는 양안관계의 비정치, 민간교류 범위와 정도가 너무 광대하고 깊다. 결국 중국이 원하는 통일이나 대만이 원하는 독립 모두 불가능하다. 적어도 중단기적으로 시간은 통일과 독립 누구의 편도 아니다. 시간을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지속될 뿐이다.

## 5. 한반도, 대만해협 위기와 무관한가?

미중 패권경쟁이 고조되면서 대만해협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연계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과 중국은 시기에 따라 대만해협과 한반도의 전쟁 혹은 평화의 요인으로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무력 충돌의 불행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미중수교, 중국의 개혁개방

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이 상호협력에 중점을 두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대만해협과 한반도의 평화적 현상유지를 촉진했다. 그러나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대만해협과 한반도를 각자의 유리한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결이 심화되면서 미국과 중국은 역내의 평화보다는 갈등-대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과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대만문제를 재인식하고 각종 정책 전환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대북 인식과 정책은 이념·역사·혁명의 유대를 강조하는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그동안 시진핑은 북한에 대한 과거(血盟), 현재(不安), 미래(存續)의 세 가지 인식을 적절히 조합하여 ‘자의적 균형전략(strategy of arbitrary balancing act)’을 추진해왔다. 이는 철저히 자국 이익의 극대화 관점에서 대남한, 대북한 관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현상유지에 무게를 두었다. 그러나 미국이 대만문제를 통한 대중 압박 전략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면서 중국은 북한을 주요 방어막으로 구축할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을 괴롭히는데 북한만한 카드가 없으며, 특히 2019년 6월 시진핑의 평양방문 이후 중국은 북한과 새로운 차원의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선을 재건하고 있다. 김정은 역시 미국의 대만문제 개입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하며 측근할 정도로 시진핑을 응원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선택 여하에 따라 대만해협과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의 문제가 상호 연동되어 악순환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둘째, 한반도 평화·안정의 핵심 사안인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미중협력은 적어도 당분간 재개되기 어렵다. 발리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은 북한의 무력 시위가 지속될 경우 동북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 증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지만 시진핑은 북한이 왜 그러는지 그 '핵심(症結)'을 들여다보라고 반문했다. 이는 체제 불안, 경제 상황 악화에 대한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북한을 압박하면서 중국도 이에 동참하라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중국의 기본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이 대만문제에서 '획기적 양보'를 하지 않는 한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안정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이 고조될수록 시진핑이 집착하는 한반도에 대한 역사적 '중주권', 한국전쟁 이후의 현실적 '지분권'을 내세우며 한반도 문제에 공세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특히 중국은 2018년, 2019년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의 한반도 관련 논의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경험을 교훈삼아 앞으로는 자국의 역할과 지분에 대한 확실한 안배가 없을 경우 한반도 평화 증진에 공을 들이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코로나-19 이후 한층 강화된 대북 정치·경제·안보적 통제력으로 북미 접촉에 대한 '방해'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결국 미중 패권경쟁이 이미 한반도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미중협력은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증가하고 이에 대응한 미국과 대만의 군사력 전개가 일상화되면서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 가능성과 주한 미군, 주일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 현 단계에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공격과 미중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시진핑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공격 가능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대만통일을 중국공산당의 확고부동한(矢志不渝) 역사적 임무로 규정하는 상황에서 제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미국 역시 오스틴(Lloyd Austin) 국방장관과 에이브럼스(Robert Bruce

Abrams), 라 카메라(Paul J. LaCamera) 등 전 현직 주한 미사령관의 발언을 통해 대만해협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주한, 주일 미군의 역할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미중 패권경쟁이 대만해협의 군사적 대립으로 확산되면서 그 여파가 한반도에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대북전략도 한반도 평화·안정, 북한 비핵화보다는 미국의 공세에 맞서기 위한 과거의 동맹형태로 돌아가고 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의지와 능력은 이미 크게 약화되었으며 국제여론을 의식하여 진정성 없이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할 뿐이다.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될수록 중국은 북한을 끌어안고 한반도 문제에 최대한 개입하려 할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중국이라는 간섭꾼이 재등장하는 것이 달갑지 않겠지만 제재 국면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를 거부할 여력이 없다.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의 문제가 또다시 미국과 중국의 손에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 5. 결론

미중 패권경쟁이 ‘미국식’, ‘중국식’을 전면에 내세우는 체제·이념·가치의 경쟁으로 확대, 심화되고 있다. 과거 중국은 미국의 ‘힘’을 인정했고 미국은 중국의 ‘가능성’을 믿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시진핑은 미국이 제국주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중국을 겁박한다고 분노하며 바이든은 중국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기존 국제질서를 교란시키는 공산주의 전제국가라고 맹비난한다. 특히 미국은 20차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을 영수(領袖)로 하는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한 중국을 묵과할 수 없는 ‘조직적 도전자’로 규정하고 있다. 첫 대면 회담인 발리 정상회담에서도 기본적인 위기관리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서로의 이

견과 대결 의지를 재확인했을 뿐이다.

미중 패권경쟁이 가열되면 대만문제에 대한 갈등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물론 당장 대만해협의 무력 충돌 발생하고 동아시아 지역을 전쟁의 위협으로 몰고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수세적인 입장의 중국은 바이드의 노련한 공세에 맞서 사안의 성격과 방어역량을 고려하여 협력, 경쟁, 대결의 복합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즉 경제·환경 등과 관련된 상호협력, 기술 분야의 치열한 경쟁, 핵심 이익 수호를 위한 대결 불사 등의 전략을 혼용할 것이다. 미국 역시 모든 분야에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울 수 없다는 점에서 중국의 이러한 전략은 현실적이다. 문제는 바이드의 공세가 중국이 체제의 속성상 극복하기 힘든 약한 고리에 집중되고, 특히 미국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연대하여 다국적, 다층적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열악한 자유·민주·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감은 중국이 물리적 힘만으로는 방어할 수 없는 최대 약점이다. 더욱이 홍콩 민주화 시위 진압과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확연히 드러난 수직적 권력구조와 폐쇄적 정책결정 과정, 자유 없는 사회, 공산당이 개인의 삶을 좌우하는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과 비호감도는 시진핑의 집권 3기에 더욱 증폭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특히 북한은 매우 유용한 다목적 카드다. 중국은 미중 패권경쟁이 대만해협을 거쳐 한반도로 확산되는 단계에서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물론 한국전쟁에 이은 제2의 항미원조를 재현하는 북중 밀착에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김정은은 여전히 북미 관계개선에 미련이 있으며 경험적으로 중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선 언제든 돌아설 수 있다는 뿌리 깊은 불신도 여전하다. 미국이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북한, 중국 모두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혈맹 회복을 의도적으로 과시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미중 패권경쟁과 양

안의 통일·독립 문제가 단기적으로 종식될 사안이 아닌 것처럼 북중 전략적 연대는 대만해협과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를 연동시키는 주요 변수로 상존할 것이다.

대만문제가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부정적으로 연계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관계의 안정을 회복해야 하지만 최근 남북, 북미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 발리 한중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무력 시위 중단과 비핵화 논의 재개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구했지만 지금 시진핑에게 한미가 원하는 북한의 변화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대북 제안의 ‘담대함’을 설명하는 윤 대통령에게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는 시진핑의 훈수는 많은 것을 암시한다. 시진핑은 북한의 핵심 요구가 고려되지 않은 담대함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상대가 인정하지 않는 담대함은 결국 국내 정치를 고려한 자기과시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시진핑의 이러한 의중은 북한이 호응하면 그때 협력하겠다는 면피성 발언에서도 잘 나타난다.

결국 미중 패권경쟁에서 촉발된 대만해협,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관리하기 위한 관련 국가들의 실효성 있는 대화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편협한 자국 이익과 국내 정치적 계산에 함몰된 대외전략은 성공하기 어렵다. 특히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일부 국가 혹은 특정 정치세력이 독점해서는 안된다. 동북아 국제질서의 구조적 특성상 한 지역의 군사적 긴장은 그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 전체적으로 시진핑 집권 3기의 양안 관계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논문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문제의식이 잘 정리된 수준 높은 발제임.
- 특히 대만을 적극 지원하는 미국이 원하는 대만의 미래상은 무엇이며, 시진핑의 중국이 대만문제의 해결방식으로 ‘일국양제’ 통일방안을 고수할 것인지, 양안의 통일과 독립에 있어서 시간은 과연 누구의 편인지, 또 대만해협과 한반도의 안보적 상호연계성에 관한 네 가지 문제 제기는 시진핑 3기 체제에서 펼쳐질 양안 관계의 미래를 조망하는 정리된 틀을 잘 제공하고 있음.
- 우선, 미국은 대만과의 관계를 미중관계의 ‘일부분(subset)’이 아닌 독립적 관계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는 데 동의함.
- 둘째, 중국은 핵심 이익의 상징인 대만문제가 협상·타협·양보의 대상이 아니라는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양안 경제교류, 인적교류의 현실을 고려하여 대만을 향한 유인책을 확대하고, 현실적 해법으로 일국양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지적도 적절함.

- 셋째, 점점 고조되는 미중의 패권 다툼이 결국 대만해협외의 전쟁을 유발할 것인가에 대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미국·중국·대만 모두 예측 불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군사적 충돌을 감행할 이유가 없지만, 제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도 적절한 지적임.
- 마지막으로 미중 패권경쟁이 고조되면서 대만해협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연계되는 것은 불가피하며,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주일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미칠 파장을 언급한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지적임.
- 전반적으로 본 연구가 제시하는 사실과 그 분석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러한 논의 구조는 전반적으로 미래 양안 관계를 연구하려는 후학들에게도 좋은 답론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문 교수님께서 발표 주제의 제약으로 양안 관계의 모든 부분을 다 다루지 못한 관계로 양안 관계 연구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인식을 공유하고자 함.
- 첫째, 양안 문제의 복합적 성격임. 중국과 대만 관계를 지칭하는 양안 관계는 영토, 인구, 군사력, 자원 및 국제 영향력 등에서 명백한 비대칭 불균형 구조를 갖고 있음. 여기에 대만을 흡수해 민족 통일을 달성하려는 중국의 공산당 정부와 독립 국가 건설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민진당 등 대만 내 독립 세력, 그리고 민진당의 노선에 반발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제 생존공간 확보를

위해 양안 관계의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국민당 진영의 입장과 대만을 대중 전체의 중간지대로 운용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strategic ambiguity)'이 복잡하게 얽혀있음. 이에 따라 대만 내부의 정권 성향도 문제지만 이미 양안 관계는 미-중-대만 삼각 구도임.

- 둘째, 미국의 대만 지원에 대한 본질적 이유를 이해해야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을 이해할 수 있음. 대만해협의 전략적 가치는 미국에 있어 다차원적임. 중국과의 지정학적 경쟁과 군사안보의 차원에서 중국이 대만해협을 장악하게 되면 남중국해 분쟁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으로 통항하는 자원 및 에너지 수송의 제약을 통해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퇴출을 요구하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음. 최근에는 반도체가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는 게임체인저로 등장하면서 대만 반도체 산업은 미국이 대만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음. 여기에 가치와 정체성의 차원에서도 민주주의와 인권 등 서구적 보편 가치를 내재화하고 있는 대만은 미국적 세계관 확장에 중요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임.
  
- 셋째, 대만 내부 이른바 '대만 정체성'의 고착화를 이해해야 함. 대만의 미래와 관련해 중국이 더 관심을 갖는 대목은 민진당이 통치하는 대만이든 국민당이 통치하는 대만이든 대만의 정치지형이 크게 변화했다는 점임. 특히 민진당은 '대만 의식(臺灣意識)'으로 불리는 대만 주권 의식의 고착을 독자 노선 설정의 근간으로 삼으면서, 대만 민주 발전의 토착화 및 대만 본토의식의 정치화를 통해 중국대륙에서 건너온 외래 세력의 압제를 극복해 민

주화를 이루고 대만 토착민이 대만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다는 주체 의식을 고양하고 있음. 실제로 대만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대만인’으로만 인식한 비율은 1992년의 17.6%에서 2022년 67%로 4배나 증가해 20여 년 동안 대만 사회의 ‘본토의식(本土意識)’이 크게 강화되었음. 이는 양안 교류와 협력이 증가했던 마잉주(馬英九) 시기(2008~2016년)에도 강화되는 등 대만 사회의 ‘대만 정체성’은 이미 고착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넷째, 대만해협에 안보위기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함. 미국과 일본이 개입하게 되면, 그 영향 범위가 남중국해, 동중국해, 심지어 한반도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동아시아의 화약고에 연쇄반응을 일으켜 동아시아 전역이 전쟁의 혼란 속에 빠져들 수 있음. 대만해협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고려할 여유가 없을 것임. 주한 미군은 미국 군사력의 일부인 동시에 한국에 주둔하고 있으므로 주한 미군이 미중 군사 충돌에 개입될 경우 한국도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은 우선 자국 방어와 북한의 군사작전 저지를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임. 대만해협 유사시 한국이 동맹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최대치는 미군에 군수 보급을 지원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가장 냉철한 판단으로 보임.
  
- 다섯째, 양안 문제를 지나치게 무력 충돌 시나리오에 집중하면서 평화통일이나 협상 등 다른 접근은 완전히 배제되고 있음. 특히 시진핑 3기의 대외 강경 기조 성격이 강조되면서 선입관으로 고착되는 경향이 있음. 이는 대만인의 상당수가 여전히 현상 유지를 원하고 있으며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위기 시나리오에서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지만, 전쟁을 원하지 않는 대만인이 친중 노선을 선택해 평화충돌을 피하고자 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고려는 불충분함. 이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대만 위기론을 내세워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위기의식을 작동시키는 미국의 군산(軍山) 복합논리와 과연 미국이 끝까지 도와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기 때문임. 실제로 미군의 전력 투사는 용이하지 않으며, 정치적 고려가 우선될 수도 있기 때문임.

- 마지막으로 한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는 선언을 주도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하는 동시에 다자주의적 입장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한국의 국익에 매우 중요함을 피력해야 함.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미국과의 전략 대화를 통해 대만해협 유사시의 시나리오를 협의할 필요가 있음. 대만분쟁은 단순한 지역분쟁이 아니며, 중국진출 한국 기업의 전략적 선택공간을 옥죄 수 있고, 중국은 한국의 대미 경사와 한미일 3각 협력 구도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며, 미국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대중 편승을 억제하기 위해 대만 문제에 대한 이슈 파이팅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또한 20차 공산당 대표대회를 통해 새로 구성된 왕이(王毅)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친강(秦剛) 외교부장의 강성 외교라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 경제

## 발표

박한진(중국경제관측연구소장)

## 토론

박상수(충북대 교수)



발표

# 경제안보와 대만과 한국기업의 활로: 대립 혹은 상생

박한진(중국경제관측연구소장)\*

## 1. 문제 제기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국제통상 환경의 급변 속에 ‘경제안보’는 국제관계 전반에 걸쳐 자주 언급되고 있지만 그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통일된 개념 정립이 되어있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는 침체 위기경보가 울리고 있고 각국 간 경제적 갈등은 심화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전개는 경제안보의 개념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경제산업적 유사한 구조가 많으며, 국제관계에서도 유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한국과 대만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이 보고서는 먼저 경제안보의 개념을 최근 용어 정의에 관한 논의와 동향 흐름을 살펴본 뒤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개념 구성을 하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대만 간 교역 동향과 구조를 살펴서 양자가 대립 혹은 경쟁보다는 협력이 가능한 상생 분야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 전 KOTRA 중국지역본부장, 타이베이무역관장 역임.

## 2. 경제안보의 개념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는 최근 각국 정부와 학계에서 대중 매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국제 및 국내 관계 관련 용어의 하나다. 동시에 그 개념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기도 한다. 우선 사전적 의미 차원에서부터 다양한 용어 풀이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며, 학계에서도 학자 개인에 따라 관점과 견해가 서로 다르거나 차별화된 현상이 빈번하다. 또한 국가별로도 개별 국가가 특정 시기에 처하게 되는 대내외 여건과 국가가 지향하는 외교 전략과 정책,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천부적인 경제지리적 요인에 따라서도 다양한 의미가 있다. 개별 국가 혹은 학자 차원에서도 국내외 여건 변화 혹은 정책 중점 방향 등에 따라 역시 해석이 분분할 수 있다.

### 가. 경제안보의 용어 정의

경제안보의 사전적 용어 가운데 국내와 해외의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본다면 한국 최대의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는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개념의 진화 일반적으로 ‘경제안보’란 국가의 권력(power)과 부(wealth)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적 자원, 재원 및 시장에 충분히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sup>1)</sup>

세계 최대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는 경제안보를 개인의 경제적 안보와 국가 경제안보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국가 경제안보에 대해서는 “국내 정치 및 국제관계의 맥락에서 국가 경제 안보는 국

---

1) 네이버 검색(검색일: 2023.1.3.).

가가 원하는 방식으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국가 정복은 약탈, 새로운 자원에 대한 접근 및 정복 국가의 경제 통제를 통한 무역 확대를 통해 정복자를 부자로 만들었고 오늘날의 복잡한 국제 무역 시스템은 다국적 협정과 상호 의존성을 특징으로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시스템하에서 천연자원의 가용성과 생산 및 분배 능력은 필수적이며, 많은 전문가가 경제 안보가 군사 정책만큼 국가안보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이다.<sup>2)</sup> 경제 안보는 미국의 국제관계에서 핵심적인 결정 요인이 되었으며, 특히 1973년 오일 쇼크와 9.11테러(2001.9.11.) 이후 석유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그와 같은 경향이 강하다.

위와 같은 정의는 경제안보라는 용어가 국가별로 서로 상이한 차원에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학계와 유관기관 혹은 정부에서도 전문가에 따라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1월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그 다양한 견해를 확인할 수 있다.<sup>3)</sup>

---

2) 원문은 다음과 같다. In the context of domestic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national economic security is the ability of a country to follow its choice of policies to develop the national economy in the manner desired. Historically, conquest of nations have made conquerors rich through plunder, access to new resources and enlarged trade through controlling of the economies of conquered nations. Today's complex system of international trade is characterized by multi-national agreements and mutual inter-dependence. Availability of natural resources and capacity for production and distribution are essential under this system, leading many experts to consider economic security to be as important a part of national security as military policy.

Economic security has been proposed as a key determina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particularly in the geopolitics of petroleum in American foreign policy after 1973 oil crisis and September 11, 2001, [https://en.wikipedia.org/wiki/Economic\\_security](https://en.wikipedia.org/wiki/Economic_security) (검색일: 2023.1.3.).

## 나. 경제안보의 흐름 변화

중국 정부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중 하나인 중국사회과학원은 정기 학술간행물에 번역 게재한 “세계화 전망은 정말 암울한가?”라는 분석 보고서에서 세계화의 관점에서 경제안보의 개념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었다.<sup>4)</sup> 경제안보의 개념 변화에 관한 연구도 여러 차원의 관점과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국사회과학원의 이 보고서는 세계화의 관점에서 접근해 현재 전개되고 있는 상황과 맞으며, 역사적 사실 기술 관련해 비교적 객관적으로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경제안보의 개념 변화를 요약한

---

3)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가 공동 개최한 세미나(2022.1.21.)에서 경제안보의 개념에 관한 다양한 해석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외부의 유무형 경제적 충격에 대한 방어”(김홍중 원장)라고 했고 동 기관에서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외부의) 경제적 공세로부터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경제안보이며, 첨단기술과 공급망, 디지털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 국방부의 경우 “경제안보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거나 발전시키고, 미국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국제적 이익을 형성하고, 비경제적 도전을 물리칠 수 있는 물질적 자원을 소유하는 능력”이라는 정의를 소개하기도 했다.

서울대 일본연구소(김현철 소장, 국제대학원 교수)는 경제안보 개념을 방어적 혹은 적극적 차원의 대응으로 풀이했다. 방어적 측면에서는 요소수 사태와 같은 공급망의 ‘단절’, 일본의 수출규제와 같은 공급망의 ‘무기화’에 대비해 전략적 안정성과 회복탄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적극적 측면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등 공급망의 주요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전략적 우월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외교부(양자경제외교국장)의 경우 “경제안보에 대한 여러 개념이 아직 형성 중이고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외교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돼 온 상호의존적 세계화 과정에서 상호의존의 무기화, 경제의 외교적 수단화”라고 이해하고 외교 정책 수립에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78874&ref=A> (검색일: 2023.1.2.).

4) André Sapir 文, 宋海锐 编译(2022), “全球化前景真的暗淡了吗?,” 《全球智库半月谈》总第246期, 中国社会科学院世界经济与政治研究所.

다. 세계화의 흐름은 크게 나누어 볼 수도 있고, 세부적으로 구분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세계화 내지는 경제안보의 배경적 개념 변화 자체에 관한 연구라기보다는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국과 대만의 경제적인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화의 흐름을 크게 나누어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현대적 의미에서 세계화의 첫 물결은 18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세계화의 발생은 운송 부문에서 촉발됐다고 볼 수 있다. 통신 기술의 진보와 함께 교역 내지는 거래 비용을 대폭 줄어들었고, 본산지였던 유럽은 정치적 차원에서 자신들을 개방하기로 하고, 해외에 산재하는 시장과 관련해서는 시장은 식민주의나 제국주의를 통해 각국의 시장을 강제로 열도록 압박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 같은 구조는 40년에서 50년 기간 동안 지속돼 대체로 191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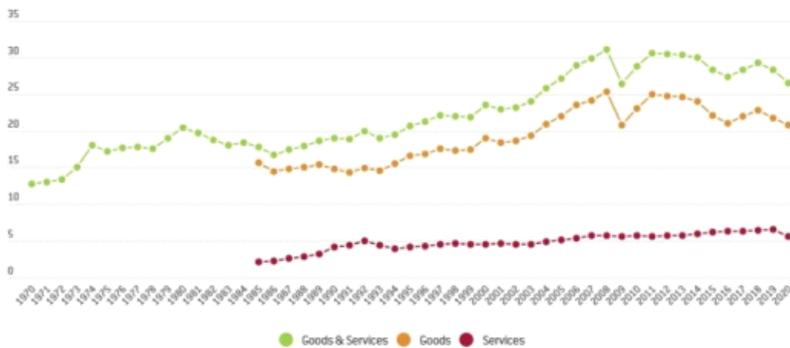
뒤이어 약 30년간 탈세계화의 시기가 있었는데, 그 특징은 대외무역 부문에서 용이성 및 투자 흐름의 강력한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화의 시기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세계는 198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전 세계 무역의 통합이 1914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당시 탈세계화의 시기를 지나 세계가 다시 일체화의 흐름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서구 선진국은 물론 중국과 소련, 인도 등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록 속도의 상이함은 있지만 대체로 개방과 교류라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방향성은 동일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초 세계는 고도로 세계화된 시기로 접어들었는데, 그 원인과 배경은 제1차 세계화의 원인은 유사하다. 즉 운송과 통신의 기술적 진보가 추동력이 되었고 선진국의 기업들은 해외에 산재한 저비용 노동력 국가로부터 노동 집약적 이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또는 신흥 경제국 간의 글로벌 공급망이 연결되면서 무역과 투자의 초(hyper)세계화 과정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세계 상품무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는 역사적으로 20%를 넘어선 적이 없는데 1990년 이후 이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파급되기 시작하기 전인 2008에 31%로 최고조에 달했고 그 이후 점차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그림 1〉 참조).

〈그림 1〉 세계 무역의 세계 GDP 내 비율의 변화 추이(1970~2020)

(단위: %)



자료 : IMF 및 WTO의 세계 무역 및 서비스 무역 통계

이후 초세계화는 정체되었고, 탈세계화 혹은 ‘슬로우(slow) 세계화’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는 2000년 COVID-19로 인해 이 비율은 2020년에 그래프의 수준이 회복세에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의 경우를 구분해서 보면 상황이 다르다. 상품무역의 탈세계화가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전 세계 상품무역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이 최고점이지만 서비스 무역의 경우는 이와는 다른 방향의 흐름을 보였다. 2008년 이후 글로벌 서비스 무역 대 글로벌 GDP 비율

은 오히려 계속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2020년에는 COVID-19와 관련된 감소 구간도 있었다.

돌아해보면 세계화 내지는 초세계화는 세계적 차원의 부의 성장, 신흥 경제국과 선진 경제국 간의 경제적 연결 강화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간, 국가 내 경제적·정치적 긴장과 경쟁이 심화했고, 이에 따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되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국제 분업은 약 한 세기 동안 지속되었다. 전자는 완제품을 전문으로 하고, 후자는 농산물이나 원자재를 전문으로 취급하면서 국제 분업이 크게 번성한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서 거대한 저변의 변화가 동반되었는데 그것은 오늘날 적지 않은 수의 개발도상국이 이미 많은 영역에서 선진국의 주요 경쟁 상대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 시스템은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 사이의 갈수록 격렬해지는 국제 상황에 대처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양상으로 변지고 있다. 과거 국가 간 갈등 요인을 효과적으로 조율하던 글로벌 거버넌스, 대표적으로 UN과 WTO 같은 기구의 역할이 현저하게 약화된 것도 특성적 흐름이다.

#### 다. 경제안보의 현실적 개념 구성

이처럼 현실적으로 다양한 차원과 관점에서 활용되고 있는 경제안보는 시기별로 그 개념이 변화해왔다는 점이 특별히 주목된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국내외 상황을 잘 반영한 대표적인 연구 사례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sup>5)</sup>와 외교안보연구소<sup>6)</sup>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본 고에서는 기

---

5) 허재철 외(2022), 『미중 전략경쟁 시대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6) 이효영(2022), 『경제안보의 개념과 최근 동향 평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초 문헌 연구 차원에서 두 기관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경제안보의 개념 변화와 그 속에서 나타나는 국가별 특성을 요약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의 경제안보 이슈를 과거의 현실주의적 고전 지정학이 아니라 자유주의, 구성주의 등을 포괄하는 '복합지정학(Complex Geopolitics)'의 시각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같은 기초 위에서 경제안보 개념을 크게 경제적 통치술(economic statecraft)과 경제회복력(economy resilience), 그리고 상호신뢰(mutual trust) 구축이라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경제적 통치술은 자국의 국가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상대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역과 투자, 금융 등 분야의 경제적 수단을 힘의 원천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뜻하며 경제회복력은 경제 영역과 관련한 국가 이익이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방안으로, 설령 물리적 위협을 받더라도 곧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경제회복력은 민감성(sensitivity)과 취약성(vulnerability)에 대한 대응력이라고 하는데, 그 요체는 상대방에 대한 의존성을 낮춰 민감성을 줄이고, 유사시에 대비한 대안을 마련하여 취약성을 낮출 때 경제회복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상호신뢰는 경제안보의 심리적 측면을 설명한 것으로, 결국 국가 간 신뢰 구축 없이는 안정적인 경제안보 환경을 조성할 수 없다고 보는 시각이다.

한편 외교안보연구소의 연구에서도 경제통치술을 중요하게 다루며 이를 “국가운영기술의 일환으로 상대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경제적 정책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국가운영기술은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를 보호하고 국가의 대외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정책적 수단을 의미하며, 이 중 경제적 수단을 통해 자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외적 환경을 변화시키고 상대국의 정책과 행위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인데, 국가가 추구하는

대외정책 목적은 다양하며, 대표적으로 상대국의 지도부 및 정치체제의 약화 또는 강화, 상대국의 경쟁력 약화, 특정 이념 또는 가치의 촉진, 동맹국 확보 및 유지 또는 상대국의 동맹 약화, 전쟁 억제 및 확산 방지, 상대국의 경제성장에 영향 및 경제체제의 변화 유도 등이 있다는 견해다. 경제적 통치술의 형태는 수출통제 및 경제제재 조치와 같은 부정적 수단뿐 아니라 관세 인하 및 비차별대우(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와 같은 긍정적인 수단도 있으며, 궁극적으로 경제적 수단을 통해 경제적 및 비경제적(정치적)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외교안보연구소는 자유무역(free trade)도 경제적 통치술의 한 형태로 이해될 수 있으며, 1950년대 이후 전후 세계 경제 회복의 가속화, 군사적 동맹 강화, 전략적 원자재 및 개도국 수출시장 확보를 목적으로 한 경제적 통치술로써 비차별주의 원칙에 기반한 국제경제 체제를 수립한 것으로 평가했다. 보호주의 성격의 수입 관세 부과는 대표적인 부정적 형태의 경제적 통치술로써 국내 고용 창출 및 임금수준 유지, 경제적 자립도 제고를 목적으로 활용되며 영향력이 큰 국내 생산자들의 보호를 통해 국내정치적 목적도 동시에 추구한다. 수출입 보조금 및 수출입 허가 등의 조치는 상대국 기업의 전략적 재화 및 기술의 자국 유치 등을 위한 긍정적 형태의 경제적 통치술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다면 한국과 대만은 종래 경제산업에서 대립적, 경쟁적 양상을 보여왔지만 유사한 경제구조와 밀접한 교역구조, 그리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제환경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상생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볼 수 있으며 이는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 3. 대 대만 교역 현황 및 경제교류 협력 검토 분야<sup>7)</sup>

#### 가. 대 대만 교역 현황

한국과 대만의 상품 교역액은 1965년 1,241만 달러에서 2021년 477억 7,100만 달러로 3,850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가 7억 달러에서 1조 2,600억 달러로 1,800배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볼 때 한-대만 교역은 우리나라 전체 무역 신장률의 2배를 넘어선다.

지난 약 60년 동안의 교역구조와 규모는 통계적으로 볼 때 대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역수지 측면에서는 한국과 대만이 시계열 기준으로 적자와 흑자를 번갈아 보여와서 비교적 공평한 구조였다고 볼 수 있다. 1965년부터 1990년까지는 한국이 대만에 대해 무역 적자 구조였다. 이어서 1991년부터 2008년 韓 흑자로 전환됐고 '09년 이후 전반적 다시 대만의 흑자로 전환됐다. 상품구조 측면에서 보면 한국과 대만이 상호에게 수출하는 품목군이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2022년 1~10월 기준으로 한국의 대대만 수출 상위 10대 품목(MTI 코드)은 반도체(MTI831), 기구부품(834), 반도체 제조용 장비(732), 석유화학 중간원료(212), 농약 및 의약품(226), 석유제품(133), 기초유분(211), 레일 및 철 구조물(615), 컴퓨터(813),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746) 등이다. 10대 품목이 전체 대대만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2% 수준이다.

동 기간 상위 10대 수입품은 반도체(831), 기구부품(834), 컴퓨터(8

---

7) 이 부분은 2022년 인아시아포럼에서 저자가 발표한 한-대만 교역 현황 및 기업 간 협력 검토 분야를 재구성·편집했으며 일부 분야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발간한 『2023년 대만진출 전략』을 참고했음을 밝힌다.

13), 광학기기(715), 반도체제조용장비(732), 철강판(613), 동제품(622), 정밀화학원료, 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장비, 합성수지 등이다. 전 품목에 걸쳐 동일 산업 내 무역이 발생하는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한국과 대만이 유사한 국제적 경제 여건에 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한국과 대만이 경제적으로 상호 경쟁 내지는 대립적으로 향하기보다는, 설령 국제무대에서 같은 톤의 목소리를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더라도, 양자 간 경제교류 활성화가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나. 경제교류 협력 검토 분야

한-대만 기업 간 경제교류는 상호시장개척 따라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이라기보다는 짜여진 상품구조 내에서 커져 온 양상이다. 향후 기업 간 협력 확대를 위해 “유망 분야 중심의 프로젝트별 협력 모색”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유망 분야로는 우선 큰 틀에서 스타트업, 해상풍력발전, 탄소중립 등을 꼽을 수 있다. 상호진출을 통한 윈-윈 도모. 프로젝트 단위의 상호진출은 투자와 무역을 동시에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동시에 양자 간 잠재적 마찰 대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상호 경쟁 영역이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지만 반도체 제조 장비와 소재 등 영역에서는 양국 모두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개발 등 상호협력의 공간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반도체와 같이 대규모 투자와 오랜 연구개발 시간이 소요되는 분야인 경우, 정부가 연구개발-세제-인력양성 등 전 분야에 걸쳐 연계되고 세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대만은 이런 영역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만은 다양한 미래 산업 분야에서 선도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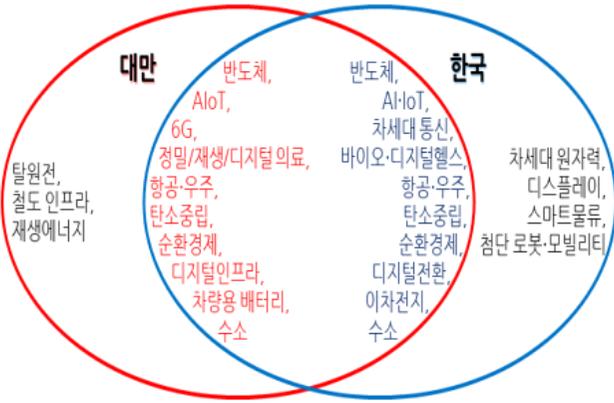
대만 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기관인 공업기술연구원은 '2050 수소에너지 응용발전기술 청사진'을 발표하였고, 대만 방통위(NCC)는 '디지털 중개서비스법' 초안을 확정해 온라인 플랫폼(페이스북, 유튜브 등 각종 SNS) 사업자, 온라인 서비스(인터넷 접속, 캐싱, 호스팅 분야) 제공자를 대상으로 투명한 정보공개,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 등에 대한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또 대만 MET(Medical Excellence Taiwan)와 일본 MEJ(Medical Excellence Japan)는 민관합동 의료산업 해외 진출 지원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바이오, 의료기기, 의료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동남아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폭스콘은 가오슝에서 '배터리셀 연구개발·시범생산센터' 기공식을 갖고, 2024년 1분기경 연간 생산능력 1.27GWh 생산 시작을 예정하고 있다. 또 대만 경제부는 산업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인 '산업혁신조례(產業創新條例)'의 개정을 추진해 핵심산업에 대한 R&D 투자, 첨단공정장비 구매 관련 조세지원 조항을 추가하고 지원 규모 확대를 꾀하는 중이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2050 탄소중립 관련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대만 전역에 전기차 충전기 6,500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석유화학업체 Formosa는 2.08억 달러를 투자해 2025년 12월 양산을 예정으로 미국 텍사스주에 친환경 플라스틱인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인 연산 10만 톤 규모의 '1-헥센'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대만은 미래 핵심기술 영역에 관한 지속해서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또한 핵심기술 인력 확보의 경우 국내 우수인력 육성과 해외 핵심 인력 유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한국이 정책 활용 차원에

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대만의 중점 산업 분야를 비교해 보면 양국이 겹치는 영역이 있는데 이를 경쟁적 공간이라고 보기보다는 교류 협력의 시각에서 접근해보는 검토가 필요하다(〈그림 2〉 참조).

〈그림 2〉 한국과 대만의 중점 산업 분야 및 교류 검토 분야



자료: 기획재정부, 대만 행정원 국가발전위원회, “2023 대만 진출전략” 재인용.

산업육성 정책 외에도 대만은 한국과 유사한 경제건설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 정부 정책 측면에서 벤치마킹의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지역이다.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에서부터 징역 제도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영역에서 대만이 정책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효과적인 학습 대상이 될 수 있다. 스타트업 분야는 양측 모두 인프라와 인력 기반이 우수하고 한-대만 모두 관련 분야 투자가 증가세에 있어 ‘강강(強強)’ 협력형 모델이 가능할 것이다. 상호 스타트업 교류 플랫폼을 활용해서 한-대만 양방향 진출을 확대하면서 전략적인 제휴 기회를 모색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아울러 탄소중립 분야에서 에너지 저장, 미래자동차

차, 수소에너지 등 분야 프로젝트 협력 모색이 유망하고 혁신·환경 관련 공통 이슈에 대한 교류 확대 및 동반성장 기회도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한-대만 간 산학 경제산업 공동연구회를 설치해 상설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한국과 대만은 산업구조 및 대중국 경제 의존도 측면에서 공통점이 많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측면의 양자 간 협력과제 발굴 및 추진 기반으로 작용한다. 이곳에서 한-대만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보고서 시리즈를 발간해 재계가 활용하거나 대정부 건의 사항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란 국가의 권력(power)과 부(wealth)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적 자원, 재원 및 시장에 충분히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외부의 유무형 경제적 충격에 대한 방어’(김홍중 원장)라고 했고 동 기관에서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외부의) 경제적 공세로부터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경제안보이며, 첨단기술과 공급망, 디지털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 국방부의 경우 “경제안보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거나 발전시키고, 미국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국제적 이익을 형성하고, 비경제적 도전을 물리칠 수 있는 물질적 자원을 소유하는 능력”이라는 정의를 소개하기도 했다.”

□ 경제안보가 경제적 이슈로만 설명될 수 있는가? “安美經中”의 현실적 한계에서 보여주듯 신냉전체제 속 경제안보란 동일 민주체제 국가 간의 가치사슬 속 연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 B3W(2021 G7) >> PGII(2022 G7):

일대일로 vs. B3W(2021 G7) vs. PGII(2022 G7)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 B3W)’:

2021 G7 정상회의 영국(40조 달러) 반중(反中) 블록 확대, ‘마음이 맞는(like-minded)’ 국가들 한국(?)

#‘글로벌 인프라 및 투자를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PGII)’ 2022 G7 정상회의 독일(6 천억 달러) 현실화

○ IPEF: EPN >>> IPEF

#경제안보 #미일정상회담(2022.5.22.~24.)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7개국 참여(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불참) #쿼드4개국(미국, 일본, 호주, 인도) + 한국, 뉴질랜드(아시아-태평양 4개국(Asia-Pacific Four·AP 4: 한국, 뉴질랜드, 호주, 일본) + 아세안 7개국 #피지 14번째 IPEF 참가(2022.5.27.) #대만불참

- IPEF: 일본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정상(화상)회담 개최(2022.5.23. 오후)

\* 미국 주최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브루나이 등 13개국 정상 참여, 피지 14번째 IPEF 참가 (2022.5.27.)

● 공동선언문 전문

- 우리 경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구축 절차를 개시한다.

- “우리는 아래 필리(pillars)에 관한 향후 협상을 위한 공동의 논의를 개시한다. 프레임워크 파트너들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해당 논의에 참여할 것이며, 우리는 기타 관심 있는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의 참여를 환영한다.”

● 필리(pillars)

- 무역: 우리는 높은 수준의 포용적이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협정(trade commitments)의 수립 및 경제 활동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하며 근로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폭넓은 목표를 추구하는 무역과 기술 정책에 있어서 새롭고 창의적인 접근방식을 개발하고자 한다. 우리의 노력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협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공급망: 우리는 공급망을 보다 회복력 있고 통합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공급망 내 투명성과 다양성, 안보, 지속가능성 향상에 전념한다.
- 청정에너지, 탈탄소화, 인프라: 국민과 근로자 생계 지원을 위한 파리협정의 목표 및 노력의 연장선에서, 우리는 경제의 탈탄소화를 추구하고 기후 영향에 대한 회복력 강화를 위해, 청정에너지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가속화하고자 한다.
- 조세 및 반부패: 우리는, 인도 태평양 지역 탈세와 부패 방지를 위한 기존의 다자간 의무 및 기준, 협정에 따라, 실질적이고 강력한 세금, 자금세탁방지, 뇌물방지체제를 제정·집행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데에 전념을 다 한다.

-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0월(2021.10.27.)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제안한 IPEF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는 기존의 무역협정과 달리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 협력체
  
- 중국과 관계를 의식해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의 참여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10개국 중 7개국이 참여: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IPEF 출범을 위해 서명한 나라 가운데 대만은 들어 있지 않아
  - #도쿄,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정상회의
  - 바이든 대통령 2022.5.24. 도쿄에서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정상회의
  - #쿼드 정상회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의지 재확인(2022.5.24.)
  - #중국 겨냥 불법어업 단속 구상 발표
  - #해양상황인식 체계
  - #암흑선단
  - #인도-태평양 지역 인프라 5년간 500억 달러(약 63조 원) 이상 투자
  
- 경제번영네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
  - 2020.5.21. 미국 트럼프 행정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보고서 의회 제출
  - \*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EPN은 미국의 반중(反中) 경제블록: 한국과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베트남 등 참여 요구

- 중국이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에 대응하려는 것
- # EPN
- #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 # 피지 14번째 IPEF 참가(2022.5.27.)
- 2022.5.27.(현지 시각) 백악관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 피지의 IPEF 가입 사실을 확인

■ “상호 경쟁 영역이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지만 반도체 제조 장비와 소재 등 영역에서는 양국 모두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 개발 등 상호 협력의 공간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반도체와 같이 대규모 투자와 오랜 연구개발 시간이 소요되는 분야인 경우, 정부가 연구개발-세제-인력양성 등 전 분야에 걸쳐 연계되고 세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대만은 이런 영역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만은 다양한 미래 산업 분야에서 선도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한-대만 간 반도체 분야의 경쟁과 공생 속 대미 투자로 인한 향후 전망 경쟁력은?

# TSMC 대미 투자 규모 총 240억 달러

- 대만, TSMC 대미 투자 규모 총 240억 달러

\*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세계 1위 대만 TSMC가 미국 내 생산기지 확대(2022.11.9.): 최첨단 공정인 3나노 기술이 적용된 공장, 투자 금액 현재 미 애리조나에 건설 중인 공장과 비슷한 120억 달러(약 16조 4천160억 원) 규모

\* 새로 건설할 제2공장은 3나노급 공정이 적용될 전망. 3나노는

삼성전자가 2022년 6월에야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최신 공정

- TSMC, 2020년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파운드리 공장 건설 발표, 오는 2024년 첨단 공정인 5나노 반도체 제품 양산을 목표로 공장 짓고 있어.

- \* 산공장은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2만장 생산 능력을 갖출 계획으로, 2021년 착공을 시작해 2024년 첫 제품을 양산할 계획: 2021년부터 2029년까지 투입되는 설비 투자액은 120억 달러 (약 14조 7천456억 원)

# 삼성, 美 텍사스주에 250조 원(2천억 달러) 반도체 공장 신설 추진(20220720): 투자? vs. 탈 한국?

- 삼성전자가 향후 20년에 걸쳐 2천억 달러 가까운 거금을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 11곳을 신설하는 중장기 계획 추진: 테일러와 오스틴 공장 11곳에 1천921억 달러, 우리 돈 252조 원의 투자금을 들여 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

- \* 삼성전자 초대형 투자 계획은 미 의회가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 위해 50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 지급 추진 가운데 공개

- \* 텍사스주, 챕터 313 세금 프로그램에 따라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말인 이 프로그램의 만료를 앞두고 삼성전자 외에도 네덜란드 NXP와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이 신청서 제출

# 외교

## 발표

장영희(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연구교수)

## 토론

공유식(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발표

## 시진핑 3기의 양안관계 전망과 한반도와의 상관성

장영희(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연구교수)

본 발제문은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고 구조화되는 상황에서 양안관계의 구조적 요인들을 분석하고 시진핑 3기의 양안관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한반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전망하고자 한다.

### 1. 현재 대만 정세에 대한 평가: ‘열전’을 향해 가는 대만해협

대만해협이라는 공간에는 두 개의 삼각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미국, 중국, 대만 사이에 큰 삼각관계가 맺어져 있고 중국공산당, 국민당, 민진당 사이에 작은 삼각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두 개의 삼각관계 사이에 복잡다단한 변화가 있었다. 작은 삼각관계에 긴장이 생겼을 때 큰 삼각관계가 안전핀 역할을 하기도 하고, 큰 삼각관계에 긴장이 생겼을 때 작은 삼각관계에서 안정을 유도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큰 삼각관계와 작은 삼각관계에 동시에 긴장이 발생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그 단초는 2016년 대만에서 민진당의 집권과 함께 시작되었고 미국

과 중국이 전략경쟁을 본격화하면서 시작되었다. 중국공산당은 본토주의 정체성과 대만독립이라는 정치적 신념을 표방하는 민진당에 대해 큰 불신을 갖고 있고, 반공과 반중이 결합된 가치관을 가진 민진당도 중국에 대해 불신이 깊다. 대만해협에서는 민진당이 집권할 때마다 긴장 국면이 조성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대만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중국을 압박하고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중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을 취했다. 한편 시진핑 체제는 민족주의 정서에 기반하여 중국공산당의 집권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만도 민진당 소속의 차이잉원 총통이 본토주의와 탈중국화 정서에 기반하여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중 간의 신냉전 구도, 민진당의 집권과 탈중국화 추세, 대만 사회에서의 정체성의 정치 강화 등이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서 통일에 이르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양안관계에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비평화적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원심력을 차단하고 싶었을 터인데, 이러한 조급함이 대만을 미국과 더욱 밀착하게 만들었다.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국제정치적 구조, 그리고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미국, 중국, 대만 각각의 국내정치적 요인 등으로 인해 양안의 정권을 잡고 있는 중국공산당과 민진당 사이에는 대화와 협상의 플랫폼이 작동하지 않고 있고, 대만해협의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심각한 안보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

게다가 미중 간의 전략경쟁이 구조화되고 장기화되면서 지정학적으로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고, 특히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이 미중 경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평가 속에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게임체인저'로 여겨지면서 미국이 전략적으로 대만을 포기할 수 없게 되었고 미

중 양국은 점점 투키디데스의 함정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 가. 흔들리는 '92 컨센서스'의 딜레마

대만의 헌법상의 공식 명칭은 '중화민국'이다. 1949년 국공내전에서 패한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패퇴한 후 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통치되어 왔지만, 중국은 대만을 반역의 땅이라 여기고 반드시 통일하겠다고 다짐해 왔다. 대만 사회는 2,300만 명에 달하는 인구로 이뤄져 있고 민주적으로 선택된 정부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 그런데 대만의 정치 지도자들은 대만의 (국가로서의) 지위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극명한 입장차를 갖고 있다.

2016년에 대만 총통으로 선출된 차이잉원 총통은 전임자인 마잉주 총통이 양안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지해온 '92 컨센서스'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베이징은 대만에 대해 점점 더 공격적인 행동을 취해 왔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이 미국을 중국과의 전쟁으로 끌어들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만이 존재하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고 단언한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만과의 통일을 추구한다. 중국은 대만이 '92 컨센서스'로 알려진 합의에 구속된다고 주장한다. 이 컨센서스는 당시 대만을 통치하던 국민당과 중국공산당 사이에 이뤄진 합의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이 '컨센서스'의 내용에 있어서 서로 합의를 이뤘던 것은 아니며 대만의 법적 지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언급한 바와 같이 '92 컨센서스'는 "양안이 하나의 중국에 속하며 민족의 통일을 위해 협력하자"는 합의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국민당은 92 컨센서스가 의

미하는 것이 “하나의 중국과 이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중화민국이 하나의 중국을 대표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당은 2016년 대선과 2020년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에 연이어 패한 후 대만의 여론 지형에서 ‘92 컨센서스’가 설 자리가 없다는 판단 하에 ‘92 컨센서스’를 당론에서 배제하는 것을 논의하기도 했다.

국민당의 경쟁 정당인 민진당은 92 컨센서스에 제시된 인식을 인정하지 않아 왔다. 민진당 주석인 차이잉원 총통은 이 컨센서스를 명시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거부해 왔다. 대신에 중국이 받아들일만한 다른 입장을 찾으려고 시도했다. 2016년 취임사에서 차이잉원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정신을 담고 있는 중화민국 헌법에 따라 총통에 선출되었으며 중화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차이잉원은 또한 “중화민국의 헌법, 대만 및 대륙 지역 인민관계 조례(台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 그리고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양안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입장을 거절하고 대만과의 공식적인 대화를 단절했다.

## 나. ‘일국양제’의 일방성과 20차 당 대회 ‘대만 독립 반대’의 합의

개혁개방 초기인 1981년 중국 당국은 대만에 자본주의와 군대의 유지 등을 약속하는 고도의 자치권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통일 방안을 언급하고 1982년 12월에 ‘일국양제’ 통일 방식을 처음 제안했다. 시진핑도 2019년 1월 연설에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오랜 제안인 ‘일국양제’를 재차 확인했다. 즉 대만이 ‘일국양제’라는 공식에 따라 중국 대륙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홍콩에 적용된 것과 같은 것으로 정치 및 경제 시스템의 유지를 보장받으며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받는 것이다. 그러나 홍콩의 자유에 대한 베이징의 탄압을 상기시키

는 이 프레임은 대만 대중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없는 상태이다. 민진당뿐만 아니라 국민당도 ‘일국양제’의 프레임을 거부해 왔다.

대만인들 대부분은 현상 유지(status quo)를 지지한다. 국립정치대 선거연구센터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소수의 사람들만 즉각적인 독립을 지지하고 있다. 대만과 중국의 통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이다. 그리고 압도적인 다수가 “일국양제” 모델을 거부한다. 중국이 홍콩의 자치와 민주주의를 침해하면서 일국양제에 대한 반대 의사가 더욱 강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만 사회에서 점점 더 본토주의 의식이 강화되고 있다. 국립정치대의 2022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만인들의 63.7%가 자신을 대만인으로 생각한다. 이에 비해 30.4%는 대만인이자 중국인이라는 이중 정체성(dual identity)을 갖고 있다. 약 2% 만이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생각한다. 1994년 조사에서는 26%가 자신을 중국인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매우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 속에 일국양제가 대만 여론지형에서 수용되려면 중국의 도덕적 정당성과 소프트파워가 필요하지만, 중국은 자신의 담론이 대만 사회에서 불신감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개의치 않고 있다.

중국공산당 20차 당 대회에서는 “대만 독립에 단호히 반대하고 억제할 것”이라는 문구가 중국공산당 당장에 삽입되면서 큰 관심을 끌었다. 중국공산당의 이러한 조치는 어떤 실제적인 의미를 갖는다고보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중국과 대만 각각의 “벼랑 끝 전술” 행태를 심화시켜 대만해협 정세를 가열시킬 것이다. 20차 당 대회에서 중국공산당은 당장(黨章)에 대만과 관련된 부분에서 “정치적으로 건전한 군대, 개혁적 강군, 과학기술 강군, 인재 강군, 법률에 따른 군대의 통치를 견지하여 인민군대를 세계 일류 군대가 되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일국양제’의 방침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고 확고하게 관철하면서 대만독립에 단호히 반대하고 억제할 것”이라는 문구

를 삽입하기로 결의했다.

20차 당 대회를 통해 수정된 당장(黨章)의 내용이 대만 통일의 구체적인 행동이나 시간표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공산당이 대만 문제의 국제문제화와 외부세력 개입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전의 당장에서는 대만을 단결해야할 ‘동포’로 간주했다면, 새 당장에서는 대만인들의 잠재된 희망이 경계해야 할 리스크임을 강조한다. 5년 전 19차 당 대회가 채택한 당장의 대만 관련 부분에서는 “홍콩특별행정구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동포, 그리고 대만 동포와 해외 동포를 포함한 전국 인민의 단결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일국양제의 방침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촉진하고 조국통일 대업을 완성한다”라는 문구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수사적 변화는 중국의 온건파들의 목소리를 약화시켜 대만에 대해 더이상 화해의 자세를 취할 수 없게 만들어 오판의 가능성을 높이고 정세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이 중국공산당원들에게 지침이 되는 문건이기 때문이다.

## 다. 미국과 대만은 운명을 같이할 것인가?

1979년에 미국은 중국과 수교 관계를 맺고 중화민국(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으며 상호방위조약을 파기했다. 그러나 미국은 대만과 강력한 비공식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지속적으로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 규범적 차원에서 미국의 대만 정책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1972년, 1978년, 1982년에 이뤄진 세 개의 미중 공동성명, 1979년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대만관계법, 그리고 최근에 기밀 해제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2년 대만에 전달한 “6가지 보장”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 문서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첫째, 미국은 “하나의 중국만 존재하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것”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중국의 입장을 인정(acknowledge)한다. (일부 미국 관리들은 ‘인정(acknowledge)’이라는 단어의 사용이 미국이 중국의 입장을 완전히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둘째, 미국은 분쟁 해결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셋째, 미국재대만협회(美國在台協會, AIT)를 통해 대만과 문화, 상업 및 기타 유대 관계를 유지한다. 넷째, 대만이 자기 방위를 할 수 있도록 대만에 무기 판매를 약속한다. 다섯째,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지는 않으면서 대만 방위를 위한 능력을 유지할 것이다. 이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알려진 정책 스탠스이기도 하다.

미국의 목표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며 베이징과 타이베이 모두 현상(status quo)을 유지할 것을 촉구해 왔다. 이를 위해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통해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대만을 지원하는 것과 중국과의 전쟁을 방지하는 것 사이에서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공격하면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하며 이 정책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백악관 관리들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대응 방법을 결정하겠지만 미국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바이든의 발언을 일축했다. 미국의 조야에서는 바이든의 발언을 환영하면서 중국의 공격성이 커졌기 때문에 미국이 명확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만해협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 이중 역제의 효과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은 여전히 이러한 입장 변화에 동의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은 180억 달러 이상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고 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미국재대만협회 건물을 공개하는 등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만과의 유대를 강화했다. 트럼프는 취임을 앞두고 차이잉원 총통과 전화 통화를 했으며, 이는 1979년 이후 양측 간 최고 수준의 접촉이었다. 그는 또한 각료를 포함한 여러 행정부 고위 관리들을 타이베이에 보냈다. 트럼프 임기 말 미 국무부는 미국 관리들과 대만 관리들이 만날 때 오랫동안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던 장소와 방법에 대한 제약을 없앴다.

바이든 행정부는 무기 판매를 계속하고 미국 관리들이 대만 관리들과 더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수용하는 등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바이든은 최초로 대만 대표단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했다. 미국은 대만과의 군사 훈련과 대화에 참여하고, 정기적으로 대만해협을 통과하면서 자국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 또한 대만의 국방비 증액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대만은 지난 수년 동안 미국 의회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왔다. 미국 의회의 의원들이 미국-대만 관계를 돈독히 하고 대만 방어를 강화하며 국제 기구에 대한 대만의 참여를 독려하는 입법이 제안 및 통과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제안된 법안인 “2022년 대만정책법안”과 ‘2023년 국방수권법’이 그 사례이다.

## 라. 회색지대 전술로 귀결되는 중국 매파의 논리

### 1) 4개의 시나리오

대만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면 그 양상은 중국군의 속전속결 침공, 대만해협의 해상 봉쇄 및 주변 도서 점령, 회색지대 전술을 통한

심리전, 우발적 충돌 등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로, 중국이 실질적으로 대만 통일을 목표로 한다면 그 방법은 참수 작전 등을 포함한 속전 속결 전략이 될 것임을 가설로 세울 수 있다. 미군이 개입하기 전에 신속하게 대만의 항복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만에 대한 중국의 속전속결 침공의 가능성은 당분간 매우 낮다. 대만해협을 지리적 제한 때문에 중국군은 대규모 상륙작전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 중국이 비록 지난 20여 년간 군사력을 수십 배 키워 왔고, 대만해협 부근에서 중국의 전력은 미국보다 우세하며, 미국이 샌디에고나 알래스카 등에 주둔하고 있는 주력군을 대만해협에 증파하는 데 2-3주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현재 중국군은 항공 및 해상 분야에서 병력 수송 능력과 보급선에 약점을 갖고 있다.

두 번째로 대만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해상봉쇄나 진먼다오, 타이핑다오 등에 대한 침공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대만 주변 도서에 대한 침공과 대만 봉쇄는 우선순위가 낮다. 대만 주변 도서를 공격의 표적으로 삼는 것은 미군의 직접 개입을 피할 가능성은 있지만,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가 침묵할 리 없다. 오히려 대만 침공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게 만드는 역효과만 낳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여론 공세는 중국 경제에 커다란 악재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작은 성과를 위해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중국군이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일상적으로 들락거리면서 대만군이 많은 인력과 비용을 지불하게 해 심리적으로 피폐한 상태를 만드는 '회색지대 전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대만의 국내 정치와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사이버전과 정보전을 통해 심리전을 펼칠 가능성도 매우 높고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사이버 공격으로 중요시설을 마비시키고 가짜뉴스를 퍼뜨려

대만 사회를 교란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도 있다. 일부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발적 충돌로 인해 대만해협이 건잡을 수 없는 분쟁 국면에 돌입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기도 하는데, 우발적 충돌의 경우에는 확전 가능성이 낮다. 미중 양국이 우발적 상황이 정면 대결로 확전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2) 시진핑의 투쟁론과 매파의 논리

시진핑 주석은 20차 당 대회 정치보고에서 ‘안전’과 ‘안보’라는 용어를 총 89회(19차 당 대회에서는 55회) 사용했다. 또한 그가 선호하는 ‘투쟁’이라는 단어도 총 17회 사용되었다. 안보가 그와 시진핑 3기에서 최대의 관심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시진핑이 체제 정당성의 근거를 경제성장에서 안보로 전환하려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시진핑의 ‘투쟁론’은 덩샤오핑의 노선인 ‘도광양회’ 노선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고, 이는 최근 몇 년간 공세적 외교를 전개해 온 중국이 갈등에 직면했을 때 피하거나 굽히지 않고 결연하게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전랑외교’를 추진하고 남중국해의 인공섬 및 압초를 군사화하며 대만해협에서 ‘회색지대 충돌’을 활용하는 것은 시진핑 시기 들어서 이미 중국의 조건반사처럼 되었다. 시진핑의 ‘투쟁론’이 중국 외교안보 행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국이 대외 및 양안정책에서 현상을 변경하기 위해 공세적 전략을 선택했음을 보여준다.

군 출신으로 중국 내 매파의 목소리를 견인하는 『무제한 전쟁(超限戰; Unrestricted War)』의 저자 차오량(喬良)은 “대만문제는 국운과

관련된 것으로 경솔하게 급진적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제하의 글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전략과 대만의 정치 지형을 고려할 때 “평화적 통일은 기대할 수 없고 무력 통일만이 방법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이 군사적으로 아직 충분한 능력과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서둘러서는 안 되며,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대업을 망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전략적 고려 외에도 최고지도자로서 시진핑 개인의 정치적 우선순위가 전략적 선택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미 3연임을 통해 권력을 공고화한 시진핑으로서는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으로 더 이상의 정치적 이익을 증가시킬 수는 없다. 무력 통일의 시도를 통해 시진핑의 권력이 더욱 강화되기보다는, 만일의 경우 전쟁의 불확실성에 빠지거나 착오가 일어날 경우 중앙군사위 주석인 시진핑이 책임을 져야하고 나아가 일당체제에도 위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승리해야만 하고 패배가 용납되지 않는 게임은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최고지도자가 쉽사리 선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이나 재정 및 외환보유액은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시진핑의 ‘투쟁론’과 차오량의 ‘신중한 무력통일론’을 종합해 보면, 현재 중국의 매파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쟁과 평화 사이의 “회색지대 전술”을 활용하고 비전통적 무력과 전통적 무력을 혼합하여 운용하는 것을 최선의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회색지대 전술의 양상

랜드 연구소의 정의에 따르면 회색지대 전술이란 “평화와 전쟁 사이의 작전 공간에서 위협적 조치로 현상(status quo)을 바꾸는 것을 의

미하며 군사적 대응을 촉발할 수 있는 문턱을 넘지 않는 작전 공간을 활용하여 군사와 비군사적 경계선을 모호하게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회색지대 전술을 예로 들면, 허위 정보를 활용하여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치 제도를 흔드는 방식, 에너지 자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활용하여 양보를 얻어내는 방식, 경제적 관계(경제적 상호의존성의 무기화)를 통해 리스크를 우려하는 국가들을 조종하는 방식 등을 포함한다. 또한 국경 근처에서의 훈련을 통해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방식도 회색지대 전술에 포함된다. 회색지대 전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상대가 군사적 대응을 정당화하지 못하게 하는 수준에서 작전 공간을 설정
- ② 한 번의 단계로 작전을 완료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하는 조치
- ③ 원인과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렵게 하는 작전
- ④ 법적으로나 정치적인 이유를 광범위하게 사용함으로써 충돌을 정당화
- ⑤ 상대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심이익은 건드리지 않기
- ⑥ 위협의 수위를 높여 압박의 도구로 활용
- ⑦ 주로 비군사적 수단을 사용하여 군사적 대응의 마지노선 피하기
- ⑧ 상대의 약점을 노리기

이러한 특징에 근거하면, 회색지대 전술은 주로 비군사적 수단과 대응으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군사적 대응이 가능한 네 가지 옵션(군사·외교·정보·경제)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서 회색지대 전술은 대규모 전쟁(major war)이라는 군사적 충돌의 문턱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 수단과 범위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다. 이는 공격한 당사자에게 상당한 행동의 자유를 부여하면서 비용과 대가의 리스크를 감

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국은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는 것 외에 경제적 강압과 정치적 압박을 사용하여 회색지대 전술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 2. 한반도와의 상관성

미국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따른 제4차 대만해협 위기 상황에서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진행된 중국군의 군사훈련은 단순히 불쾌감을 드러내는 무력 시위의 성격을 넘어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을 준비하는 군사 작전 시나리오 점검의 성격도 보였다. 중국군의 대만 봉쇄 훈련의 위치를 보면 대만의 남서부(남중국해)와 대만의 동부(서태평양)에서 진입하는 미군을 차단하고 대만의 북동부에서 한반도와 일본에서 전개되는 미군 군사 자산을 차단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대만 주위에서의 군사훈련 후 실탄 사격을 하며 군사훈련을 이어갔는데 이는 유사시 주한미군과 주일 미군의 대만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훈련으로 해석된다. 중국도 대만 봉쇄 작전에서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을 크게 의식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 가.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대응 방안

한국은 미국과의 전략 대화에서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미군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반대할 수 없다. 2006년 1월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외교통상부의 반기문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고 말했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미국은 한국 국민의 뜻

에 반하는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이 지역 내 미국의 이익과 목적을 지키기 위해 작전을 시행할 경우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북한의 도발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비 시나리오가 있어야 하고 미군이 제주 해군기지 사용을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이 대만 통일을 위해 고강도 전면전을 실행할 경우 속전속결을 목표로 할 것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대한 원점 타격 계획을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이 문제를 중국과의 전략대화 의제로 삼아 한국의 불개입 입장을 밝히고 한국 영토 공격 시 한국이 연루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중국이 저강도 전쟁을 펼치거나 대만에 대해 제한적인 공격을 가할 때 미국은 전쟁의 확산 방지에 중점을 두면서 국제적인 여론전을 펼칠 것이다. 한국은 그러한 상황에서는 군사적 관여의 의사가 없음을 미리 미국 측에 양해를 구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

대만해협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에너지 수입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일 양국의 운송원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다. 만약 충돌의 시간이 오래 지속되고 범위가 확대되면 해운이 봉쇄되는 현상이 나타나 양국 경제가 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 대한 외국 자본의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안 충돌사태가 발생하면 한국의 위협회피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미일동맹, 한미동맹의 끈으로 묶여 한국 역시 끌려들어갈 처지가 된다. 미국의 항모 전단과 괌-하와이-오키나와, 주일 미군기지, 주한 미군기지는 군사전략적으로 긴밀하게 얽혀 있다. '대만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오키나와 기지에서 미군이 출격하고 난세이 제도의 병력과 미사일이 중국을 겨누게 돼, 일본도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한미동맹의 협력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주변지역으로 확대하는 데에 합의했다. 만약 대만해협 내 유사 사태가 발생한다면 미국은 대만 방어를 위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을 대만 인근으로 이동할 뿐 아니라 한국 내 주한미군 기지를 발진 기지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북한이 미국의 대한 안보 공약이 약화될 것으로 오판하고 군사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는 대만해협 유사 사태 발생 시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대만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충돌의 규모와 기간에 따라 다른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 충돌의 범위가 작고 시간이 짧을 경우 한국은 반도체나 경제 분야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충돌이 확대되고 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한국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해 저강도 전쟁을 벌일 경우에 한국은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무역 이익과 북한의 도발을 여전히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이 대만에 대해 고강도 전쟁을 벌일 경우에는 미중 강대국 간 전쟁으로 확산될 것이며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동맹국으로서의 군사안보적 책임의 부담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쌍방의 주권적 영토가 공격받았을 때만 상호 방위 의무가 있고 미국의 압박에 따라 최소한 후방 지원을 요청받게 될 것이다. 미국의 요구가 얼마나 강경할 지, 한국에 어떠한 전략적 요구를 하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가능할 수 없다.

한국도 북한과의 안보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대만해협에 유사 사태가 벌어졌을 때 중국은 북한을 통해 한국을 압박하고 주의를 분산시키려 할 것이다. 대만해협의 유사 사태가 한반도의 유사 사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미군의 후방을 지원하면서

도 북한의 기습 공격에 대비해 한반도의 안보를 지켜야하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최대한으로 미군에게 후방 보급을 하는 역할 정도만 담당함으로써 중국의 보복을 피해야 한다.

## 나. 일본의 대응에 대한 참조

대만해협 유사시 주변국의 개입과 관련하여, 일본은 미일 상호신뢰 증진, 지역 내 지위 상승의 추구, 쿼드(QUAD)의 운영, 국내 선거에의 영향 등 전략적 이익을 고려하여 한국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올해 4월의 “미일 공동성명”과 5월의 “한미 공동성명”이 대만 문제에 대해 언급한 내용의 차이를 통해 그 단초를 읽을 수 있다. 일본 자민당의 정책 공약집을 살펴보면, 대만해협을 포함한 동중국해에서 진행 중인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매우 심각한 안보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민당은 “중국의 급격한 군비 확대, 중일 간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대만 주변에서 급속히 활발해진 군사 활동, 힘을 배경으로 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진전, 최첨단 기술을 구사한 전쟁 방식 변화 등으로 인해 안보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키 위해 일본의 안보 태세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합의가 조성된 상황이다. 이에 근거하여 자민당의 핵심 공약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일본의 방위 예산을 국내총생산의 2% 수준으로 점차 늘리는 것, 둘째, 적기지 공격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 셋째,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큰 틀인 국가안전보장 전략, 방위계획 대강, 자위대가 갖춘 무기체계를 정해 둔 ‘중기 방위력정비계획’ 등을 조속히 개정하는 것 등이다.

현재 중국군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능력”은 갈수록 발전하고

있다. 일단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괌(Guam)을 포함하여 모두 중국의 타격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대만해협의 무력충돌에 개입하게 되면 중국은 일본과 한국도 적대국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북한 요인이 얽히게 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대만해협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에너지 자원 수송을 거의 전적으로 해운을 통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운송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또한 전쟁의 시간이 길어지고 범위가 확대될 경우 해상 운송이 봉쇄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는 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

## **다.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해 한국이 유지해야 할 기본 원칙**

첫째,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은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지정학적 중간국으로 일본과 처지가 다르다. 일본보다 지리적으로 중국에 더 가깝고 중국의 보복 가능성과 그 강도가 훨씬 높을 것이다. 둘째, 한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할 경우 향후 북한 문제나 통일 과정에서 훨씬 더 비협조적으로 변할 것이다. 셋째,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은 대만 문제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과의 전략 대화에 나서야 한다. 목적은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지하는데 있다. 미국과의 전략 대화를 통해 갑작스런 유사 사태 상황에서 한국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도록 한국의 우려와 역할 범위를 미국에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 3. 결론을 대신하여

만약 미중 간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지원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최소한 군수 지원 등의 협조는 불가피하다. 이는 중국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북한이 ‘중조(中朝)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에 따라 전쟁에 참여하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핵무력 사용의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군의 최우선 타격점에는 괌과 일본의 오키나와가 포함될 확률이 높다. 오키나와에 주일미군의 70% 이상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며 대만 유사 사태에 가장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의 연장선에서 주한미군 기지도 목표물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일본이라는 변수를 함께 생각하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한국 또한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대만 유사 사태의 발생은 한국에게 큰 부담이 된다. 중국은 한국이 대만해협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이다. 2021년 5월 21일 문재인 정부 시기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라는 문구가 들어갔고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이 대만해협 문제를 처음 언급했다는 점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미사일 지침 해제’와 함께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협력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한국의 대미 경도가 두드러져 보였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양안관계를 둘러싼 미중 갈등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중국 편을 들고 나섰다. 북한은 특히 대만 정세가 한반도 정세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대만해협에서의 무력 충돌은 동아시아의 안전과 평화를 심각히 훼손할 것이고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매우 곤란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 자명하다.

대만해협은 우리나라 원유 수송의 70%를 차지하는 중요 수송로이다. 장기적인 미중 갈등과 양안 갈등은 여러모로 한국에게 심각한 안보 위기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는 선언을 주도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통일 외교의 장기적 관점에서 한중 수교의 전제였던 ‘하나의 중국’을 견지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의 지정학적 안보와 지경학적 이익이 걸려 있는 문제에 대해 지식계와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시점이다.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고려할 여유가 없을 것이다. 한국은 우선 자국 방어와 북한의 군사작전 저지를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남북한이 대리전 양상에 빠지지 않고 한반도에서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적 상호신뢰 기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대만해협 유사시 한국이 동맹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최대치는 중국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 미군에 군수 보급을 지원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가장 냉철한 판단이다.

대만해협에 안보위기가 발생하고 미국과 일본이 개입하게 되면, 그 영향 범위가 남중국해, 동중국해, 심지어 한반도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동아시아의 화약고에 연쇄반응을 일으켜 동아시아 전역이 전쟁의 혼란 속에 빠져들 수 있는 것이다.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은 역외 우발 사태나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인도태평양 사령관에 여러 선택지를 제공할 위치에 있으며,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우발 상황 및 작전 계획 상에서 주한 미군의 능력을 포함시키는 것을 옹호하겠다”고 발언했다. 폴 라캐머라의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주한 미군은 미국 군사력의 일부인 동시에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 따라서 주한 미군이 미중 군사 충돌에 개입될 경우 한국도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필요에 따라 주한미군 전력을 한반도 역외로 전개하는 것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노무현 정부 시기 한미 간 중요한 논쟁이 되었다. 당시 논란은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 한국인의 의지에 반하며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 정도로 마무리되었으나 해석의 차이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민주주의,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 문제 등에 있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 완전한 디커플링이 이행되기는 쉽지 않다. 미중 양국이 대만문제를 파국적인 충돌로 몰아가는 것은 양측의 이익이 부합하지 않으며 결국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은 전쟁 억제이다. 따라서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한국의 국익에 매우 중요함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피력해야 한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미국과의 전략 대화를 통해 대만해협 유사시의 시나리오를 협의할 필요가 있다. 대만분쟁은 단순한 지역분쟁이 아니며,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전략적 선택공간을 옥죄 수 있다.

최근들어 대만에 해협이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여러 분야에서 대결구도로 들어서면서 대만이 그 대결구도의 현장이 되어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대부분의 관심은 중국이 대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미국이 대만을 과연 지켜줄 것인가, 양안 간에는 과연 긴장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등등, 대부분 국제관계 속의 관련 국가들의 입장만을 이야기하지 대만 자체에 대한 분석은 잘 하지 않는다. 물론 미중관계 속의 종속변수로서 대만을 이야기 하고는 있지만, 대만의 입장이나 대만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것에는 그리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는다. 사실 양안 간 충돌이 생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만과 대만사람들이 입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국제관계가 어떻든 우크라이나 사람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대만은 어떤 정책을 갖고 있고 대만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만과 중국 사이에서 가장 대립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문제이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하에 일국양제를 통일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대만에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만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장징궈 총통도 일국양제보다는 일국양제(一國良制)가 더 좋은 것이라는 말로 일국양제를 거절하였다. 하나의 중국원칙도

중국의 의미와 대만이 의미는 확연히 다르다. 중국의 의미는 당연히 중화인민공화국이 하나의 중국이고 대만의 의미는 대만도 중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당이 장기집권하면서 중국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공산당과 차별을 하려는 것에서 기인한다. 1992년 대만과 중국이 홍콩에서 첫 정치적 회담을 하면서 92합의라는 것을 하였고, 이 합의는 대만의 두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사실상 딱히 합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어찌보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2008년 국민당이 재집권하고 2010년 ECFA를 체결할 때 양안 간 이견의 해결방법으로 쓰인다. 즉 서로의 이해가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에는 합의했다는 것을 양쪽이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이 전제하에서 ECFA가 체결되었다. 하지만 2016년 민진당이 집권하고 92합의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사실상 부정), 중국이 92합의를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면서 하나의 중국은 오직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을 천명하면서 사실상 92합의의 시효는 끝났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하나의 중국 문제는 더 이상 회색지대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일국양제는 더더욱 양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아직까지는 그렇다. 발표자가 언급하였듯이 홍콩사태 이후 대만에서의 일국양제는 어느 정파도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 되었다. 사실 우리는 항상 국제정세 속에서만 대만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대만의 미래는 누가 주인인가를 더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1945년 국민당이 대만을 접수한 이후, 1990년까지 대만은 국민당 일당독재였고 이 시기에는 중국 정체성이 더 강하였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대만국민들은 스스로 선거로 뽑은 자신의 정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피안과는 차별화하는 정체성, 즉 중국이 말하는 대만독립적인 성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2008년 국민당의 재집권은

이에 대한 회귀라기보다는 민진당 집권시 각종 실정(失政)에 대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당분간은 그리 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만문제를 주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한 강경한 정책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특히 시진핑이 3기 집권을 확정지었고 향후 4기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현재 국제정세와 국내경제의 상황은 시진핑에게는 상당히 도전적이다. 발표자가 시진핑의 대만침공결정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은 것에는 동의한다. 회색지대 전술같이 어느 정도 수준의 무력도발은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4기로 넘어가는 2027년 전후에 정치적 필요에 의한 도발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대만 유사시 한반도는 어떨까? 당연히 우리는 대만해협이 평화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제일 좋다. 발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하지만 일단 유사시에는 우리는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도 어떤 형식이든지 참전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것이 군사적 지원이든, 경제적 지원이든 간에. 그리고 중국과의 사이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갈등을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대만해협의 평화가 필요부가결한 것이다.



# 군사

## 발표

조현규(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

## 토론

이상만(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센터장)



발표

# 대만해협 충돌 위기와 對 한반도 안보 영향

조현규(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

## 1. 들어가는 말

2022년 10월 23일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20기 1중대회(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는 시진핑(習近平)을 당 총서기 및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再) 선출함으로써 사상 초유의 3연임을 확정하였고 1인 장기 집권 체제의 서막을 열었다. 이에 따라 시진핑은 2012년 11월 중국의 최고지도자로 등극 후 자신이 주창한 ‘중국몽(中國夢)’<sup>1)</sup> 전략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동시에 자신의 집권 정당성과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대만 통일 이슈를 가일층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시진핑은 작년 10월 16일 행한 중국공산당 제20기 당 대회 개막식 업무보고 연설에서 “우리는 평화통일을 위해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을 견지하겠지만 무력사용 포기를 결코 약속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것은 외부 세력의 간섭과 극소수 대만 독립 분자와 그 분열 활동을 겨냥한 것이지 결코 광범

---

1)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한다’는 국가전략 목표로써,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2년 18차 당 대회에서 총서기에 오르면서 처음으로 내세운 이념이다. 중국몽에는 국가 부강, 민족 진흥, 인민 행복 세 가지 목표가 담겨 있으며,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도 이러한 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위한 대만 동포들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며, 또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sup>2)</sup>

또한, 중국은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2022.8.2~8.3)을 항의하기 위해 대만해협과 대만 주변 해·공역에서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대대적인 ‘대만포위 군사훈련(環台軍演)’을 진행하였다.<sup>3)</sup> 군사전문가들은 이 훈련을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기 위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하는 모의훈련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전망과 다양한 견해들이 분출되고 있는데,<sup>4)</sup> 그렇다면 중국은 과연 대만에 대해 무력통일의 길에 나설 것인가? 무력통일은 어떤 형태로, 어떤 과정으로 진행될 것인가? 본고에서는 먼저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는 3가지 상황과 서방·중국·대만이 각각 구상하고 있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와 최근 중국군의 ‘대만포위 군사훈련’을 분석하고, 양안 긴장과 충돌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향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

2) 高举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旗帜为全面建设社会主义现代化国家而团结奋斗:在中国共产党第二十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 (2023年1月2日)

3) “史上首次“环台湾大演习”!解放军划设6个演习区,包围整个台海.” 《网易》, 2022.8.3., <https://www.163.com/dy/article/HDRDGIDN0552QLGZ.html> (검색일 2023.1.2.).

4)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한 최근 견해들은 필립 데이비슨(Philip S. Davidson) 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2021.3.10.),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2022.10.3.), 마이클 길데이(Michael M. Gilday) 미국 해군참모총장(2022.10.19.), 추귀정(邱國正) 대만 국방부장(2021.10.6.), 천밍통(陳明通) 대만 국가안전국장(2022.10.20.) 등이 각각 제기한 바 있다.

## 2.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는 3가지 상황

2005년 중국이 제정한 《반국가분열법》(反分裂國家法)<sup>5)</sup> 제8조는 “대만 독립’ 세력이 어떠한 방식이나 명목으로 ①대만을 중국에서 분리시키려 하거나, 또는 ②대만을 중국에서 분리시키려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또는 ③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정부는 ‘비평화적인 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동원하여 국가주권과 영토보전을 수호할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은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는 세 가지 상황을 법률로 정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통일을 감행하는 첫 번째 상황은 어떤 명분이나 어떤 방식으로든 대만이 중국에서 분리되어 나가는 경우이다. ‘대만이 중국에서 분리되어 나가는 경우’는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①대만 당국에 의한 독립 선언, ②‘대만 독립’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③미국의 대만에 대한 외교적 승인 등이다. 독립을 향한 대만의 어떠한 움직임도 중국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레드라인(red line)이다.

무력통일을 촉발하는 두 번째 상황은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시키려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①대만의 대륙에 대한 군사적 공격, ②대만 내 대규모 폭동 발생, ③대만의 핵무기 개발 재개, ④대만 내 외국군 배치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④항은 미국 군함의 대만 기항, 대만을 미군 항공기 이착륙 및 보급기지로 사용,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대만 배치, 對대만 공격성 무기 판매 또는 임대,

---

5) 하나의 중국 원칙 재확인인 대만이 독립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중국 법률이다. 2005년 제정 당시에는 대만독립을 막기 위해 대만 관련 내용만 있었으나, 2009년 민주주의와 분리주의 압박을 강화하고자, 홍콩·마카오·티베트·위구르 분리독립 운동 이외에 중국 국내 민주화 운동과 페미니즘과 같은 중국공산당이 지정한 불온사상의 유입을 탄압할 목적으로 반분열국가법을 대폭 수정, 강화하였다.

미국 핵무기의 대만 재배치 등을 포함한다.

‘평화통일 가능성의 완전 상실’은 중국에 의한 대만 무력통일의 세 번째 상황이다. 평화통일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을 때, 중국은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평화통일 실현이 대만의 선택에 달려 있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무력통일 촉발 조건 외에, 언제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지는 대륙의 결심에 달려 있다. 대만으로는 용인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은 현실이다. 즉,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만이 지속적으로 평화통일을 지연시킬 경우, 이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평화통일 가능성의 완전 상실’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중국은 하시라도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려 할 것이다.

특히, 작년 10월 시진핑이 3연임으로 장기집권 신작로를 개척한 상황에서, 자신이 주창한 중국몽 실현의 대업 중 하나로 대만 통일 문제를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 3. 서방·대만·중국이 상정하는 중국의 대만침공 시나리오

최근 다양한 출처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정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아래 세 가지의 대표적인 시나리오와 한 가지의 새로운 전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중국의 대만침공 6단계(로이터 통신)<sup>6)</sup>

로이터통신은 2021년 하반기 대만·미국·호주·일본의 군사전략가 12

---

6) “T-DAY: The Battle for Taiwan,” 《REUTERS》, 2021.11.5., <https://www.reuters.com/investigates/special-report/taiwan-china-wargames/> (검색일: 2023.1.2.).

명, 전·현직 장교 15명과의 인터뷰와 관련 보고서 등을 토대로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는 상황을 6단계로 제시했다.

1단계는 중국이 대만 주변 영해와 영공을 침범하고, 준철선 등을 동원하여 통신 케이블을 훼손하는 등 ‘회색지대(Grey Zone)’ 전략<sup>7)</sup>을 구사하는 것이다. 2단계는 중국이 본토 푸젠성(福建省) 해안에서 9km 떨어진 대만의 마주다오(馬祖島)을 점령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중국은 푸젠성 샤먼(廈門)에서 남쪽으로 6km 떨어진 진먼다오를 점령한다. 중국은 대만에 통일을 위한 협상을 요구하지만 대만은 이를 거절한다. 3단계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대만 지원 준비에 나서고 중국은 대만 주변 해역에 허가받지 않은 비행기나 선박이 진입하는 것을 통제한다. 4단계에서 중국은 대만을 고립시키기 위해 대만에 대한 완전 봉쇄를 실시한다. 이에 미국은 일본·괌(Guam)·호주 등에서 폭격기와 잠수함 등을 출동시켜 봉쇄망 격파에 나서지만 실패하고 중국은 주일 미군기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다. 5단계에서 중국은 대만 주요 전략 및 기반 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나선다. 대만도 전투기 및 장거리 탄도·순항 미사일로 중국 본토의 공군기지와 미사일 기지를 공습한다. 대만은

---

7)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회색지대 전략을 “직접적이고 상당한 규모의 무력 사용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려는 꾸준한 억제와 보장을 넘어서는 노력 또는 일련의 노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회색지대 전략에 참여하는 행위자는 전쟁을 초래하는 문턱을 넘지 않으려 한다고 보았다. 회색지대 전략의 특징은 ‘점진주의(Gradualism)’와 ‘애매모호함(Ambiguity)’이다. 전략을 구사하는 측은 의제를 가능한 갈래 썰어내는 ‘살라미(Salami) 전술’로 상대가 의도와 동기가 무엇인지 모르게 한다. 선제적 조치로 ‘기정사실화(Fait Accompli)’하여 상대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전략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채더라도 사전 대비책이 없으면 대응할 수 없다. 이 전략은 일반적인 충돌보다는 심하지만, 대규모 군사 분쟁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제한적 물리력 사용과 함께 정보 조작, 정치 및 경제적 압박, 사이버전, 해양경비대 등 공권력 동원 등이 일어나며, 자신들을 대신하여 행동할 ‘대리인(Surrogate)’에 대한 지원도 수행된다(「국방과 기술」, 2021년 6월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지만, 중국의 통일 협상 요구에 여전히 반대한다. 6단계에서 중국은 미국 등 동맹국 전력이 도착하기 전에 대만을 점령하기 위해 대규모 상륙 및 공수부대를 투입한다. 또한 중국은 주일 미군 및 괌 기지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공격을 실시하고, 한편 미국·일본·호주는 중국 본토를 공격하는 등 결국 중국의 마주섬 침공 이후 순식간에 동아시아는 전쟁터로 변한다.

이 시나리오에서 중국은 미국의 지원전력 차단을 위해 속전속결 전략을 채택했으며,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 로이터는 “만약 중국이 이길 경우 한국과 일본의 안보력이 악화되고 중국은 아시아에서 전략적 위치가 높아지겠지만 미국 등 동맹국의 개입으로 중국군도 막대한 손실을 입어 당의 장악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나. 중국의 대만침공 4단계(대만 국방부 보고서)<sup>8)</sup>

대만 국방부 보고서는 중국군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4단계로 분류했으며, 이 중 3단계까지는 중국이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마지막 상륙작전은 중국이 이에 필요한 강습상륙함이 부족하여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대만 국방부 보고서가 가정한 중국군의 대만 침공 1단계는 중국 측이 훈련 명목으로 군을 집결시키면서 시작된다. 이어 미사일로 대만의 방공 진지와 레이더, 지휘소 등을 파괴한다. 2단계는 사이버 공격을 가해 대만 주력 부대나 시설의 기능을 정지시킨다. 2015년 우주·사이버·전자파·정보전을 일원화해 전략지원부대를 발족한 중국은 2단계까지

---

8) “중국 대만 침공작전 시나리오 실체는?,” 《한국일보》, 2022.1.4.,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10410430002798> (검색일: 2023.1.2.).

기술적으로 완료됐다고 대만 국방부는 평가했다. 3단계는 중국의 제해·제공권 확보다. 중국은 연안에 부대를 배치하고 서태평양에 함대를 집결해 미군 등 외부세력의 개입을 막고, 대만에 대한 전략적 포위망을 형성한다. 중국 해군은 항공모함 3척을 포함해 구축함 프리깃 등 약 90척의 함정을 보유하여 그 전력이 대만의 약 3배에 달한다. 제공권 확보 훈련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 군용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진입 사례도 최근 크게 늘었다. 이 보고서는 “중국군이 육해공의 모든 영역에 대한 공격을 동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적시했다. 4단계는 상륙작전이다. 상륙함이나 수송기를 이용할 것으로 추측되지만, 보고서는 “상륙작전은 중국군에게 매우 리스크가 크다”고 분석했다. 지형이 복잡한 대만 해안에 상륙하려면 강습상륙함이 꼭 필요한데, 현 시점에서 모든 부대를 동시에 수송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중국군이 운용 중인 강습상륙함이 시험 항행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한 수준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 다. 중국의 대만침공 3단계(중국의 전쟁계획)<sup>9)</sup>

중국은 2015년 말부터 미래전쟁에서 승리할 ‘합동전력’ 강화를 목표로 ‘군 개혁’을 진행하면서 대만과 서태평양의 미군과 동맹국을 상대로 하는 전쟁계획을 마련했다. 여기에서는 최우선 목표로 대만 점령을 위한 합동전역 수행을 강조하였다.

1단계는 대만에 대한 ‘합동화력작전’이다. 미사일과 공습으로 대만의 군사·정치·경제적 목표물들을 공격하여 방어능력을 제압하고 사기와

---

9) Ian Easton (2019), “China’s Top Five War Plans,” Project 2049 Institute, POLICY BRIEF 19-001, pp. 2-5.

저항의지도 약화시킨다. 중국의 목표가 대만을 응징하는 데 그친다면 협상이 진행되면서 군사작전은 장기화할 수 있다. 또 간헐적인 저강도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대만을 신속하게 점령하는 게 목표라면 폭격을 중단 없이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2단계는 대만에 대한 ‘합동봉쇄작전’이다. 이를 통해 대만의 통신을 파괴하여 고립시키고, 방어 능력과 전쟁수행 능력을 약화시킨다. 중국군은 정보통제, 제공권, 제해권을 확보하면서 전자전과 사이버전으로 대만의 금융시스템과 중요 인프라를 파괴한다. 미국의 인공위성도 공격하여 탄도미사일 탐지능력을 저하시킨다. 공습으로 대만의 지도자들을 신속하게 살해하여 병력 동원을 저지한다. 해군은 수상함·잠수함·기뢰작전을 통한 봉쇄작전으로 대만에 대한 연료와 식량 공급을 차단한다.

3단계는 대만에 대한 ‘합동공격작전’ 즉 상륙작전이다. 사전통지나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침공하여, 먼저 중국에 가까운 진먼다오를 신속하게 점령하고, 이어서 대만에서 50km 떨어진 평후다오(澎湖島)를 공격한다. 중국군이 이곳을 장악하면 광범위한 공격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 공수부대가 대만해안에 침투하여 중요 방어시설과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설들을 장악하고 해안에 교두보를 확보한다. 이후 수만 명의 병력을 상륙시켜 해안·항구·공항을 장악한다. 이와 함께 공격용 헬리콥터와 공중강습병력의 지원을 받는 특수기계화부대가 대만 중심 깊이 진격하여 타이베이와 주요 도시들을 포위하고 항복을 강요한다. 대만의 조직적 군사저항이 무력화되고 대만 정부가 붕괴되면 게릴라들도 토벌하고 동시에 미군의 상륙 가능성에 대비하여 해안방어를 강화한다.

이 시나리오는 ‘합동방공작전’을 필수적인 요소로 강조하고 있다. 즉 미군에 대한 공격을 대만 정복에 필수적인 요인으로 보고, 대만 주변과 서태평양에 배치된 미군을 저지 및 공격한다는 것이다. 즉 중국군은 방

공망을 확보한 상태에서 대만을 공격하고, 동시에 중국 공군은 미군 기지를 공습하여 미 공군의 신속한 개입과 공격을 교란시키는 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 라. 전면전 대신 전면봉쇄 작전 채택<sup>10)</sup>

중국이 대만을 굴복시키기 위해 전면전 대신 군함과 잠수함, 군용기, 미사일 등을 동원하여 대만 항구와 영공에 대한 전면봉쇄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대만 동맹국들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군용기와 미사일을 동원하는 전략을 택할 수 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전면 봉쇄에 나설 경우 지대공미사일로 적국의 군용기를 격추하려 할 것이며, 심지어 미군의 괌기지나 주일미군 기지에서 발진하는 군용기를 대상으로 공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전면 봉쇄전략을 선택할 경우 대만 국민과 세계인들 사이에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 선전전, 거짓 정보 유포, 사이버전 등의 방법도 동원할 것이다. 설사 심지어 제한된 봉쇄라 할지라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무역 항로를 위협할 수 있어서 중국이 대만에 대한 봉쇄전략을 택할 경우 대만 경제와 세계 경제에 대해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특히 대만은 에너지와 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중국의 봉쇄전략은 대만 경제에 파국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4. 2022년 중국의 ‘대만포위 군사훈련’

---

10) “How China Could Choke Taiwan,” 《NYT》, 2022.8.25.,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2/08/25/world/asia/china-taiwan-conflict-blockade.html> (검색일: 2023.1.3.).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2022.8.2~8.3)을 전후하여, 중국은 대대적인 ‘대만포위 군사훈련(環台軍演)’을 단행하였다. 즉, 중국 국방부는 8월 2일 펠로시 의장의 대만 도착 직후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설정한 6개 구역의 해(海)·공(空)역에서 중국군이 8월 4일 정각부터 8월 7일 정각까지 중요 군사훈련과 실탄사격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sup>11)</sup>

〈그림 1〉 중국군 대만포위훈련의 6개 훈련구역(2022.8.4.~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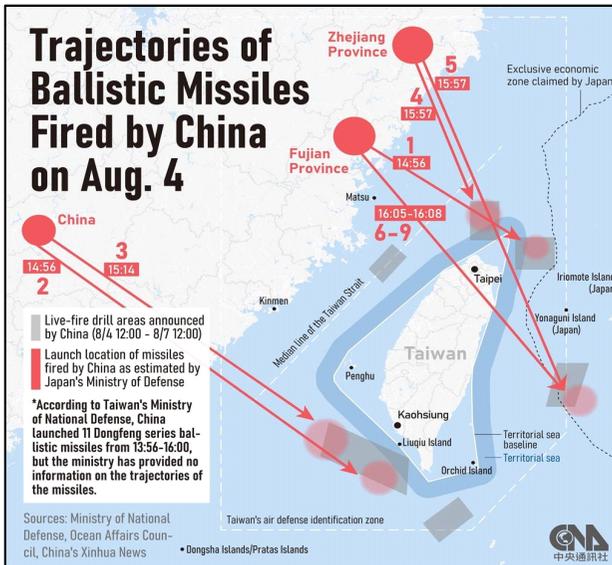
\* 출처: <https://focustaiwan.tw/cross-strait/202208030018> (검색일: 2023.1.3.).

11) 解放军将于8月4日12时至7日12时,在台湾岛周边进行重要军事演训行动,并组织实弹射击(2022.8.2.), 《搜狐》, [https://www.sohu.com/a/573767179\\_121019331?spm=smcpc.content.content.2.1667303989977vhPBwjh](https://www.sohu.com/a/573767179_121019331?spm=smcpc.content.content.2.1667303989977vhPBwjh) (검색일: 2023.1.3.).

## 가. 주요 훈련 내용

훈련 첫날인 2022년 8월 4일 중국군은 대만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 발사 훈련을 감행했다. 대만에 대한 군사작전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동부전구(東部戰區)의 스이(施毅) 대변인은 “8월 4일 오후 전구 로켓부대가 정밀타격과 지역거부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대만 동부해역의 여러 곳에 여러 형태의 재래식 미사일을 집중 타격했고, 미사일은 전부 목표물을 명중시켰다”고 발표했으며, 대만 국방부도 중국군이 8월 4일 1시 56분부터 오후 4시까지 대만 북·남·동부 해역에 총 11발의 동풍(東風, DF) 계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방위성도 11발의 미사일 중 4발이 대만 섬 상공을 통과했으며, 미사일 비행거리는 350~700km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림 2〉 중국군이 발사한 미사일의 탄도(2022.8.4.)



\* 출처: <https://focustaiwan.tw/cross-strait/202208050005> (검색일: 2023.1.3.).

또한, 중국 국방부는 8월 4일 하루에만 100여 대 이상의 군용기를 대만 무력시위에 투입했다고 밝히고 스텔스 전투기 쟈(殲)J-20의 훈련 모습을 공개했는데, J-20은 세계 최강 전투기 F-22에 맞서 개발, 실전 배치한 중국이 자체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로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제공권 장악, 중요 표적 정밀 공격 등 임무에 투입될 핵심전력으로 평가된다.

2022년 8월 10일 동부전구 대변인은 “동부전구는 최근 대만 섬 주변 해·공역에서 합동 군사행동을 완료하고, 각 분야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성하였으며, 부대의 일체화 합동작전 능력을 효과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힘으로써, 중국군이 미국 하원의장 대만 방문에 항의하기 위해 대만 주변에서 실시했던 군사행동의 종료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동부전구는 대만해협 정세 변화를 주시하며, 지속적으로 훈련과 전투 대비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서, 향후에도 대만에 대한 무력 시위를 상시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나. ‘대만포위 군사훈련’ 평가

금번 중국군의 ‘대만포위 군사훈련’에 대해 중국 국방대학의 명상칭(孟祥青) 교수는 4가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즉 ① 대만과 인접한 훈련구역, ② 대만을 포위한 훈련범위, ③ 미사일 등 실탄 사격, ④ 대만 동부해역에서의 훈련 진행 등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중국이 설정한 군사훈련 구역 6곳 가운데 3곳은 대만 해안선에서 불과 10~22km 이격된 해역이다. 또한, 대만해협 쪽 군사훈련 구역은 중국과 대만의 실질적 해상 경계선인 대만해협 중간선 동쪽의 대만 구역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명 교수

는 “대만을 포위하는 6개 훈련구역에서 대규모 훈련이 진행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히고, “전례 없이 대만과의 초근접 지역에서 훈련이 실시되어 대만 통일전쟁의 실전 능력을 키웠으며, 외부 세력의 전력 지원과 퇴로를 효율적으로 전면 차단하는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자평했다. 또한 유사시 태평양을 통해 대만에 진입하는 미국 전력 증원을 차단해야 하는 대만 동부 해역까지 미사일이 발사되는 등 이 일대가 실탄사격 훈련구역에 처음으로 포함된 것에도 의미를 부여했다.<sup>12)</sup>

한편, 대만 국방부는 중국군의 ‘대만포위 군사훈련’에 대해 “중국군의 금번 훈련은 대만의 영공과 해상을 봉쇄하는 것과 같았다”라고 밝히고, 동시에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그리고 중국이 대만 섬 주변의 해·공역을 실탄사격구역으로 선포한 것은 대만의 중요한 항구와 수도권을 위협하는데 그 의도와 중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대만의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만포위 군사훈련’은 실질적인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 중 하나로서, 명백히 ‘대만 봉쇄’에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sup>13)</sup>

결론적으로 중국의 ‘대만포위 군사훈련’은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기 위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하는 모의훈련이었으며, 중국이 육·해·공로 췌군을 동원한 ‘대만 침공’ 실병·실탄·실전 훈련이었다. 한편, 대만은 중국군의 ‘대만포위 군사훈련’ 이후 대(對) 상륙작전 전력을 포함한 비대칭 전력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중국군에 비해 현격하게 열세한 해군력 강화를 위해 ‘국함국조(國艦國造, 함정과 잠수함은 자체 개발 및 건조한다)’ 계획에 의거하여 2026년까지 한화(韓貨) 약

12) “国防大学教授孟祥青解读军演：为早日实现国家统一塑造了有利战略态势,” 《搜狐》, 2022.8.7., [https://www.sohu.com/a/574851147\\_115479](https://www.sohu.com/a/574851147_115479) (검색일: 2023.1.3.).

13) “分析：解放軍6區軍演如「繩繩」環台打個結,” 《世界新聞網》, 2022.8.5., <https://www.worldjournal.com/wj/story/121344/6515028> (검색일: 2023.1.3.).

30조 8천억 원을 투입하는 자주국방 정책을 추진 중이며, 2017년 자체 잠수함 설계에 착수하여 2024년 첫 번째 잠수함을 제작을 목표로 총 8대를 건조할 예정이다.

## 5. 한반도 안보에 대한 시사점

### 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중국과 대만은 1949년 분리 이후 긴장과 화해가 반복되어 왔고, 최근에는 긴장 요소가 더 지배적이다. 미·중 간의 군사적 대립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으로서 아직 이에 대비하는 협정이나 메커니즘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발적 충돌이 전면적 충돌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대만은 중국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지위를 제고시키려고 할 것이며,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면서 그러한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최근 ‘대만포위 군사훈련’과 같은 강경한 대응에 나서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은 언제든지 대만해협을 위협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대만해협의 긴장과 충돌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미국이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공세를 억제하는 움직임에 한국, 그리고 주한미군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우리도 중국과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 빨려 들 수 있다. 과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논란이 가능성의 차원에서 논의되었다면 이제는 현실 문제가 되는 셈이다. 폴 라캐머라 (Paul Joseph LaCamera) 주한미군 사령관은 2021년 5월 “인도태평

양 사령부의 우발 계획과 작전 계획에 주한미군의 능력을 포함시키는 것을 옹호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거나 실제 충돌 발생시 주한미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대만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북한의 군사적 행동반경을 넓힐 수 있다. 과거 6자회담이 진행되던 시기 미국과 중국이 대만에서의 이익과 북한에서의 이익을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었다. 그 당시에도 가능성이 높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그러한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 중국도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북한이 군사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용인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러한 상황은 동북아 정세가 당분간은 더 갈등적 방향으로 전개되고 그에 따라 한국의 안보 리스크도 더 커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대만해협의 긴장고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결국 대만해협의 긴장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 외에도 대만해협 상황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의 원유 수송로는 말라카 해협~남중국해~대만해협을 통과하는 경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만약 이 해상교통로가 위협을 받거나 봉쇄된다면 우리의 경제 안보, 에너지 안보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작년 8월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이 대만 주변 해·공역에 6곳의 훈련구역을 설정하여 훈련을 진행함으로써, 100여 편에 달하는 동남아행 우리 국적 항공기가 항로를 변경 및 우회함으로써 비행시간이 연장되거나 항공기 출발이 1~2시간 지연된 사례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 나. 우리의 대응 방향

대만해협 위기가 고조될 경우 우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적용 및 한국에 대한 지원 요청, 중국의 압력 증대 및 경제 제재 실행, 북한의 대남 도발 및 중국 대북 지원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대만해협 위기가 격화되거나 실제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첫째, 한국과 미국은 외교 공조를 통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평화를 위해 중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중국 지도부가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이 가져올 군사적, 외교적 비용을 명확하게 인식시킴으로써 군사행동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양안 간 국지적 분쟁 시에는 상황별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미사일 공격, 대만 일부 도서 점령, 해상 봉쇄 등 군사 충돌이 제한적이고, 미중 충돌로 확대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는 가급적 동맹 연루를 피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중국의 무력 사용을 외교적으로 비판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미국이 양안 사태에 개입하여 미중 군사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는 미국과의 협력에 대한 전략적 결정을 준비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초기 단계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를 기초로 주한미군 전력의 이동 협조, 일부 미군 전력의 한국기지 사용 협조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 한미 정보 협력, 군수지원, 해상 선박 호위 임무 수행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미중 군사 충돌이 격화되거나 장기화 될 경우 우리는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 수준을 높이는 전략적 결정을 해야 하고, 이것은 일정한 수준의 동맹 연루를 의미한다. 또한 미중 군사충돌이 격화되는 경우,

미 해군 전함들의 작전을 위한 호위 임무를 한국이 분담하거나, 중국의 북해 함대가 남하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해상작전에 동참할 것을 요청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특히 이 상황에서는 북한의 도발 및 국지분쟁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북한은 각각 한·미 동맹과 중·북 조약에 얽여 있기 때문에, 대만해협 긴장 고조 및 양안 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이는 미·중 충돌 상황으로 연결되고 결국 한반도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2021년 5월과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2022년 12월 28일 우리 정부가 발표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라고 표명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6. 맺는말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대변화로 인해 대만해협 위기 또한 한국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이다. 과거 한국전쟁 시기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제7함대를 파견하여 대만해협을 봉쇄한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대만해협은 한반도와의 지리적 인접성뿐만 아니라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상존으로 인해 한국 안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우며 도전적인 과제이다.

더욱이 최근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를 선포하고 핵미사일 통합능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대만, 그리고 미국 3자 간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이 격화될 경우 이는 한국에

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역내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가속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러관계 또한 급격히 악화되면서 전 세계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 간 대결 구도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미중 전략경쟁과 동북아 및 대만 문제를 중심으로 한 미-일 연대에 대항하여 북-중-러 연대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향후 대만해협 위기 상승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추이를 주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대만해협 위기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란과 첨단 전략무기 배치 문제 등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한 외교적·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아울러 대만해협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 구축뿐만 아니라 신뢰구축조치 강화 차원에서 정부 유관부서를 포함한 한-미, 한-중, 한-대만 전문가들 간의 보다 적극적인 교류와 소통이 절실하다.

끝으로, 우리에게 있어 대만해협의 위기는 결코 '바다 건너 불구경'이 아니다. 미-중 전략경쟁 격화와 북-중 관계 밀착 속에서 북핵 문제는 그 해결 가능성이 더욱 멀어지고 있으며, 최근 김정은의 행태를 볼 때 한반도에서 예기치 않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大) 전제 아래 경제력 10위권, 군사력 6위권의 중견국(Middle Power)으로서 현명한 외교 역량을 발휘해 나감으로써, 한반도 주변의 다양한 도전과 위기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준영. 2022, “중국-대만, 양안 무력 충돌 위기의 함의-미국의 대만 지원 및 갈등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 20(1), pp. 9-32.
- 문흥호. 2021, “미중경쟁과 대만문제-한국의 시각,” EAI 스페셜리포트 대만특집시리즈 3.
- 설인효. 2021, “대만해협 문제의 전략적 함의와 증장기 전망,” EAI 스페셜리포트 대만 특집시리즈 6.
- 장영희. 2022, “미중전략경쟁 시대 양안 안보 딜레마의 동학,” *중국사회과학논총*, 4(1), 80-106.
- 최우선. 2021, 대만 군사충돌 시나리오와 한국의 대응,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1-51.
- 吳崇涵. 2020, “美國對臺海危機之立場：戰略模糊或戰略清晰?,” *戰略安全研析*, 165期.
- 何至中. 2022, “中共強軍戰略目標對臺海威脅之研究,” *海軍學術雙月刊*第56卷4期.
- Ian Easton. 2019, “China’s Top Five War Plans,” Project 2049 Institute, POLICY BRIEF 19-001.
- Lin, Bonny. 2021, “US Allied and Partner Support for Taiwan: Responses to a Chinese Attack on Taiwan and Potential US Taiwan Policy Changes,” RAND PROJECT AIR FORCE, 2021.
- Murray, William S. and Ian Easton. 2019, “The Chinese Invasion Threat: Taiwan’s Defense and American Strategy in Asia,”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72 : No. 1, Article 10.
- Porter, Patrick & Michael Mazarr. 2021, “Countering China’s Adventurism over Taiwan: A Third Way.” Lowy Institute Report.

〈인터넷 자료〉

-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10410430002798>
- 《网易》, <https://www.163.com/dy/article/HDRDGIDN0552QLGZ.html>
- 《中央通信社》, <https://www.cna.com.tw/news/firstnews/202110060039.aspx>
- 《ETtoday 新聞雲》, <https://www.ettoday.net/news/20221006/2352796.htm>
- 《搜狐》, [https://www.sohu.com/a/573767179\\_121019331?spm=mpc.content.content.2.1667303989977vhPBwjh](https://www.sohu.com/a/573767179_121019331?spm=mpc.content.content.2.1667303989977vhPBwjh)
- 《搜狐》, [https://www.sohu.com/a/574851147\\_115479](https://www.sohu.com/a/574851147_115479)
- 《世界新聞網》, <https://www.worldjournal.com/wj/story/121344/6515028>
- 《NBC NEWS》, <https://www.nbcnews.com/news/world/china-could-invade-taiwan-next-6-years-assume-global-leadership-n1260386>
- 《Daily Mail》,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11279311/CIA-director-Bill-Burns-says-Chinas-Xi-sobered-Russias-poor-performance-Ukraine.html>
- 《REUTERS》, <https://www.reuters.com/investigates/special-report/taiwan-china-wargames/>
- 《NYT》,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2/08/25/world/asia/china-taiwan-conflict-blockade.html>

## 1. 본 발제문의 의의

○ 본 발제문은 그간 중국 군사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생산하고 있는 발제자의 혜안이 돋보임.

- 필자는 이를 통해 ①중국은 과연 대만에 대해 무력통일의 길에 나설 것인가? ②무력 통일은 어떤 형태로, 어떤 과정으로 진행될 것인가? 라는 가설 위에 먼저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는 3가지 상황과 서방·중국·대만이 각각 구상하고 있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와 최근 중국군의 ‘대만포위 군사훈련’을 분석하고, 양안 긴장과 충돌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 방향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토론자가 획득한 양안 군사문제에 대한 수확이 적지 않음.

## 2. 중국지도부의 양안통일 인식:

### 통일전선전술과 무력통일의 양공

## 가. 중국 국내 상황

- 시진핑의 2022년 10월 16일 중국공산당 제20기 당대회 개막식 업무보고 연설
  - “우리는 평화통일을 위해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을 견지하겠지만 무력사용 포기를 결코 약속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지만 이것은 외부 세력의 간섭과 극소수 대만 독립 분자와 그 분열 활동을 겨냥한 것이지 결코 광범위한 대만 동포들을 겨냥한 것은 아님.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며, 또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양안 통일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음.
  
- 이어서 2022년 10월 23일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 20기 1중전회(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도 재차 자신의 집권 정당성과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대만통일 이슈를 전면에 내세웠음. 이는 모택동의 건국, 등소평의 경제근대화, 그리고 시진핑의 통일 대업이라는 연장선상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나. 대외상황

- 향후 10년을 두고 미국은 ‘결정적인 10년(a decisive decade)’라고 했고, 중국은 ‘관건적 시대(關鍵的時代)’로 규정함으로써 금년 들어 우려했던 미중 강대국 경쟁 시대의 개막을 알림으로써 천하가 양분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임.
  
- 미국은 국방안보전략(NSS) 보고서(2022.10.12. 발간)에서 탈냉전

기의 종결과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을 선언함과 동시에 중국을 유일한 경쟁 대상이자 최대 위협 국가로 규정함.

- 미 국방부의 국방전략(NDS) 보고서(22.10.27 발간)에서도 중국을 “기존의 국제질서를 바꾸려는 의지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과 기술력 등을 모두 유일하게 갖춘 나라”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위협(multi-domain threat)’을 가하고,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로 규정했음.

○ 이러한 규정은 미중 간 전략적 경쟁 과정에서 3대 핫 스폿,

즉 ①남중국해문제, ②대만해협문제, ③북핵문제인데, 이 세 가지 핵심문제 중에서 미국 조야에서는 북핵의 고도화 문제보다도 대만해협의 긴장 고조를 더욱 관심 있게 봄으로써 이미 그 중요도에서 대만해협 위기관리 문제는 북핵문제를 뛰어넘고 있는 실정임.

- 결국 한반도 주변 정세는 현상을 타파하려는 세력과 현상을 유지하려는 세력 간 고도의 신경전이 진행되면서 대만해협의 위기에 연동되어 한반도 문제가 자리매김 할 것이고 이로인해 남북관계가 수렁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한반도의 안보딜레마가 심화되고 있음.

○ 더욱이 미중의 전략적 대결이 더욱 심화되고 강대국 정치가 부활하고 군비경쟁 시대가 재 도래하고 있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은 최저임.

-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비핵화의 딜레마로 인해 주변국들이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을 가시화함으로써 생존을 위한 군사력 증강의 일환으로 미일동맹의 강화, 일본의 방위준칙 변경, 한국의 핵무장과 전술핵 재도입 및 신형 전략자산의 배치 같은

민감한 논의가 대두되어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의 군사 안보 충돌이 예상되고 있음.

#### 다. 양안충돌의 빌미를 제공하는 사례들: 군사지원, 고위관리들의 대만방문

- 미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이 점점 증가
  - 2018년 미국과 대만의 방산업체 교류 재개 조치가 채택되어 이후 2021년까지 165.8억 달러(약 19조 9천억 원)가 넘는 무기 판매를 승인(트럼프는 퇴임 전 2020년에 F-16V 전투기, M1A2 에이브럼스의 대만형인 M1A2T 전차, 스타어 미사일 등), 2017년 미국은 자국 군함의 대만 정박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하는 등 중국은 고도의 긴장상황을 맞이함.
  
- 2018년 3월에 ‘대만여행법(2018.3월)’, 2020년의 ‘대만관계강화법’과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옵서버국 가입 승인법 등이 연쇄적으로 미 의회에 의해 정책적 법안들이 채택됨.
  - 2018년 3월 대만여행법이 통과되면서 동 법안은 고위 관리들은 대만으로 여행해 대만 공무원을 만날 수 있으며, 대만의 고위관료도 미국을 방문해 미 공무원들과 접촉을 허용했음. 알렉스 워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2018년 3월 대만을 전격 방문했고,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의 최측근인 천궈(陳菊) 가오슝(高雄) 시장도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음.
  
-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2022.8.2.~8.3) 항의

- 대만해협과 대만 주변 해·공역에서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대대적인 ‘대만포위 군사훈련(環台軍演)’을 진행하였으며 군사전문가들은 이 훈련을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기 위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하는 모의훈련으로 평가함.

○ 중국의 ‘대만포위 군사훈련’ 강행(2022.8.4.~7.)

- 중국 국방부는 8월 2일 펠로시 의장의 대만 도착 직후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설정한 6개 구역의 해(海)·공(空)역에서 중국이 육·해·공·로켓군을 동원한 ‘대만 침공’ 실병·실탄·실전 훈련이었고, 이는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기 위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하는 모의훈련으로 평가되며, 대만은 중국군의 ‘대만포위 군사훈련’ 이후 대(對) 상륙작전 전력을 포함한 비대칭 전력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

○ 2022.12.23.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국방수권법 서명과 향후 대만 정책법 서명은 중국 당국의 반발을 고조화 시킴.

- 2022년 12월 25일 중국인민해방군 공군 전투기 29대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에 무단 진입, 공중 무력시위를 벌임. 대만 국방부 당국자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 공군은 2022년 1월 23일 39대, 5월 30일 30대의 군용기가 방공식별구역(ADIZ)에 무단 진입한 바 있음. 2022년 12월 기준 3번째로 큰 규모 도발임.

○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

- 필립 데이비슨(Philip S. Davidson) 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2021.3.10.),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

보국(CIA) 국장(2022.10.3.) 마이클 길데이(Michael M. Gilday) 미국 해군참모총장(2022.10.19.), 추귀정(邱國正) 대만 국방부장(2021.10.6.), 천명통(陳明通) 대만 국가안전국장(2022.10.20.) 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했음.

#### 4.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는 3가지 상황 상징: 필자의 견해

- 중국은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는 세 가지 상황을 법률로 정함.
  - 2005년 중국이 제정한 《반국가분열법》(反分裂國家法) 제8조는 “‘대만독립’ 세력이 어떠한 방식이나 명목으로 ①대만을 중국에서 분리시키려 하거나, 또는 ②대만을 중국에서 분리시키려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또는 ③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정부는 ‘비평화적인 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동원하여 국가주권과 영토보전을 수호할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통일을 감행하는 상황
  - 첫 번째 상황: 어떤 명분이나 어떤 방식으로든 대만이 중국에서 분리되어 나가는 경우. ①대만 당국에 의한 독립 선언, ② ‘대만 독립’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③미국의 대만에 대한 외교적 승인 등. 대만독립을 향한 어떠한 움직임도 중국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레드라인(red line)임.
  - 두 번째 상황: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시키려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임. 현재 상황에서는 ①대만의 대륙에 대한 군사적

공격, ②대만 내 대규모 폭동 발생, ③대만의 핵무기 개발 재개, ④대만 내 외국군 배치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④항은 미국 군함의 대만 기항, 대만을 미군 항공기 이착륙 및 보급기지로 사용,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대만 배치, 對 대만 공격성 무기 판매 또는 임대, 미국 핵무기의 대만 재배치 등을 포함함.

- 세 번째 상황: '평화통일 가능성의 완전 상실', 즉 평화통일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중국은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평화통일 실현이 대만의 선택에 달려 있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무력통일 촉발 조건 외에, 언제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지는 대륙의 결심에 달려 있음. 대만으로서 용인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은 현실임. 즉,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만이 지속적으로 평화통일을 지연시킬 경우, 이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평화통일 가능성의 완전 상실'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중국은 하더라도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려 할 것임.

- 특히, 2022년 10월 시진핑이 3연임으로 장기 집권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2012년 주창한 '중국몽' 실현의 대업 중 하나로 대만통일 문제를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매우 높음.

### 3. 중국의 대만침공 시나리오 상정: 필자의 견해

- 중국의 대만침공 6단계(로이터 통신)<sup>1)</sup>

---

1) T-DAY: The Battle for Taiwan(2021.11.5.), <<REUTERS>>, <https://www.reuters.com/investigates/special-report/taiwan-china-wargames/> (검색일: 2023.1.2.).

- 1단계: 중국이 대만 주변 영해와 영공을 침범하고, 준설선 등을 동원하여 통신 케이블을 훼손하는 등 ‘회색지대(Grey Zone)’ 전략을 구사하는 것
- 2단계: 중국이 푸젠성(福建省) 해안에서 9km 떨어진 대만의 마주다오(馬祖島)을 점령하는 것으로 시작, 푸젠성 샤먼(廈門)에서 남쪽으로 6km 떨어진 진먼다오를 점령한 후 중국은 대만에 통일을 위한 협상을 요구하지만, 대만은 이를 거절함.
- 3단계: 미국과 일본이 대만 지원 준비에 나서고 중국은 대만 주변 해역에 허가받지 않은 비행기나 선박이 진입하는 것을 통제함.
- 4단계: 중국은 대만을 고립시키기 위해 대만에 대한 완전 봉쇄를 실시한 후 미국은 일본·괌(Guam)·호주 등에서 폭격기와 잠수함 등을 출동시켜 봉쇄망 격파에 나서지만 실패하고 중국은 주일 미군기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함.
- 5단계: 중국은 대만 주요 전략 및 기반 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나서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지만, 중국의 통일 협상 요구에 여전히 반대함.
- 6단계: 중국은 미국 등 동맹국 전력이 도착하기 전에 대만을 점령하기 위해 대규모 상륙 및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또한 중국은 주일 미군 및 괌 기지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공격을 실시하고, 한편 미국·일본·호주는 중국 본토를 공격하는 등 결국 중국의 마주섬 침공 이후 순식간에 동아시아는 전쟁터로 변함.

※ 로이터는 이 시나리오에서 중국은 미국의 지원전력 차단을 위해 속전속결 전략을 채택했으며, “만약 중국이 이길 경우 한국과 일본의 안보력이 악화되고 중국은 아시아에서 전략적 위치가 높아지겠지

만 미국 등 동맹국의 개입으로 중국군도 막대한 손실을 입어 당의 장악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음.

○ 중국의 대만침공 4단계(대만 국방부 보고서)<sup>2)</sup>

- 1단계: PLA 집결. 중국 측이 훈련 명목으로 군을 집결시키면서 시작되고 곧이어 미사일로 대만의 방공 진지와 레이더, 지휘소 등을 파괴함.
- 2단계: 사이버공격 감행. 사이버공격을 가해 대만 주력 부대나 시설의 기능을 정지. 2015년 우주·사이버·전자파·정보전을 일원화해 전략지원부대를 발족한 중국은 2단계까지 기술적으로 완료됐다고 대만 국방부는 평가했음.
- 3단계: 중국의 제해·제공권 확보. 중국은 연안에 부대를 배치하고 서태평양에 함대를 집결해 미군 등 외부 세력의 개입을 막고, 대만에 대한 전략적 포위망을 형성함. 중국 해군은 항공모함 3척을 포함해 구축함 프리깃 등 약 90척의 함정을 보유하여 그 전력이 대만의 약 3배에 달하며, 제공권 확보 훈련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 군용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진입 사례도 최근 크게 늘었음. 즉, 중국군이 육해공의 모든 영역에 대한 공격을 동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함.
- 4단계: 상륙작전. 상륙함이나 수송기를 이용할 것으로 추측되지만, 상륙작전은 중국군에게 매우 리스크가 큰 경우임. 지형이 복잡한 대만 해안에 상륙하려면 강습상륙함이 꼭 필요한데, 현실에선 모든 부대를 동시에 수송할 수 없고, 더욱이 중국군이 운용 중인 강습상륙함이 시험 항행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

2) “중국 대만 침공작전 시나리오 실체는?,” 《한국일보》, 2022.1.4.,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10410430002798> (검색일: 2023.1.2.).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한 수준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함.

○ 중국의 대만 침공 3단계(중국의 전쟁계획)<sup>3)</sup>

- 1단계: 대만에 대한 ‘합동화력작전’
- 2단계: 대만에 대한 ‘합동봉쇄작전’
- 3단계: 대만에 대한 ‘합동공격작전’ 즉 상륙작전. 이 3단계 시나리오는 ‘합동방공작전’을 필수적인 요소로 강조하고 있음. 즉 미군에 대한 공격을 대만 정복에 필수적인 요인으로 보고, 대만 주변과 서태평양에 배치된 미군을 저지 및 공격한다는 것으로 중국군은 방공망을 확보한 상태에서 대만을 공격하고, 동시에 중국 공군은 미군 기지를 공습하여 미 공군의 신속한 개입과 공격을 교란시키는 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

○ 전면전 대신 전면봉쇄 작전 채택<sup>4)</sup>

- 가능성 1: 대만해협 전면봉쇄를 위한 무력시위 가능성: 중국이 대만을 굴복시키기 위해 전면전 대신 군함과 잠수함, 군용기, 미사일 등을 동원하여 대만 항구와 영공에 대한 전면봉쇄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대만 동맹국들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군용기와 미사일을 동원하는 전략을 택할 수 있음. 중국이 대만에 대한 전면 봉쇄에 나설 경우 지대공미사일로 적국의 군용기를 격추하려 할 것이며, 심지어 미군의 괌 기지나 주일미군 기지에서 발진하는 군용기를 대

---

3) Ian Easton(2019), “China’s Top Five War Plans,” Project 2049 Institute, POLICY BRIEF 19-001. pp. 2-5.

4) “How China Could Choke Taiwan,” 《NYT》, 2022.8.25.,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2/08/25/world/asia/china-taiwan-conflict-blockade.html> (검색일 2023.1.3.).

상으로 공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됨.

- 가능성 2: 비군사적 샤프파워 이용할 가능성: 중국은 전면 봉쇄전략을 선택할 경우 대만 국민과 세계인들 사이에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 선전전, 거짓 정보 유포, 사이버전 등의 방법도 동원할 것임. 설사 심지어 제한된 봉쇄라 할지라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무역 항로를 위협할 수 있어서 중국이 대만에 대한 봉쇄전략을 택할 경우 대만 경제와 세계 경제에 대해 악영향을 끼칠 것임. 특히 대만은 에너지와 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중국의 봉쇄전략은 대만 경제에 파국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5. 한반도 안보에 대한 시사점

- 대만해협 긴장과 충돌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 첫째, 미국이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공세를 억제하는 움직임에 한국, 그리고 주한미군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할 것임. 만약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우리도 중국과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임. 과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논란이 가능성의 차원에서 논의되었다면 이제는 현실 문제가 되는 셈임. 폴 라캐머라(Paul Joseph LaCamera) 주한미군 사령관은 2021년 5월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우발 계획과 작전 계획에 주한미군의 능력을 포함시키는 것을 옹호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는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거나 실제 충돌 발생 시

주한미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둘째, 대만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북한의 군사적 행동반경을 넓힐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과거 6자회담이 진행되던 시기 미국과 중국이 대만에서의 이익과 북한에서의 이익을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었음. 중국도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북한이 군사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용인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이러한 상황은 동북아 정세가 당분간은 더 갈등적 방향으로 전개되고 그에 따라 한국의 안보 리스크도 더 커지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임. 대만해협의 긴장 고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결국 대만해협의 긴장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셋째, 해상운송로 확보가 중요함. 한국의 수출입물동량 대부분이 제주도 남방해역을 통해 5대양 6대주로 이동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만해협 위기 상황은 우리나라의 원유 수송로(말라카해협~남중국해~대만해협을 통과)가 위협을 받거나 봉쇄된다면 우리의 경제 안보, 에너지 안보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것임.

※ 2022년 8월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이 대만 주변 해공역에 6곳의 훈련구역을 설정하여 훈련을 진행함으로써, 100여편에 달하는 동남아행 우리 국적 항공기가 항로를 변경 및 우회함으로써 비행시간이 연장되거나 항공기 출발이 1~2시간 지연된 사례도 상기해야 함.

- 한반도 주변세력들의 움직임은 면밀히 관찰해야 함.
- 첫 번째,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노리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대변화로 인해 대만해협 위기 또한 한국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임. 과거 한국전쟁 시기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제7함대를 파견하여 대만해협을 봉쇄한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대만해협은 한반도와의 지리적 인접성 뿐만 아니라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상존으로 인해 한국 안보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우며 도전적인 과제임.
  - 두 번째, 한·미·일-북·중·러 간 밀착으로 인한 신냉전 현상 고조: 더욱이 최근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를 선포하고 핵미사일 통합능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대만, 그리고 미국 3자 간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이 격화될 경우 이는 한국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임. 특히 역내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가속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러 관계 또한 급격히 악화되면서 전 세계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 간 대결 구도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미중 전략경쟁과 동북아 및 대만 문제를 중심으로 한-미-일 연대에 대항하여 북-중-러 연대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 세 번째, 위기관리를 통한 중국과 북한의 오판 방지: 따라서 향후 대만해협 위기 상승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추이를 주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특히 대만해협 위기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란과 첨단 전략무기 배치 문제 등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한 외교적·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음. 아울러 대만해협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 구축뿐만 아니라 신뢰구축조치 강화 차원에서 정부 유관부서를 포함한 한-미, 한-중, 한-대만 전문가들 간의 보다 적극적인 교류와 소통이 절실함.

## 6. 한국의 대응 방향

- 대만해협 위기가 고조될 경우 우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적용 및 한국에 대한 지원 요청, 중국의 압력 증대 및 경제 제재 실행, 북한의 대남 도발 및 중국 대북 지원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대만해협 위기가 격화되거나 실제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보다 중요함.
- 첫째, 오판으로 인한 군사적 충돌을 막아야 함. 한국과 미국은 외교 공조를 통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평화를 위해 중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중국 지도부가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이 가져올 군사적, 외교적 비용을 명확하게 인식시킴으로써 군사행동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둘째, 전면적으로 확산 되지 않을 상황이라면 국제사회와 더불어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함. 양안 간 국지적 분쟁 시에는 상황별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미사일 공격, 대만 일부 도서 점령, 해상 봉쇄 등 군사 충돌이 제한적이고, 미중 충돌로 확대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는 가급적 동맹 연루를 피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중국의 무력사용을 외교적으로 비판해야 함.
- 셋째,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함. 미국이 양안 사태에 개입하여 미중 군사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는

미국과의 협력에 대한 전략적 결정을 준비해야 함.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초기 단계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를 기초로 주한미군 전력의 이동 협조, 일부 미군 전력의 한국기지 사용 협조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임. 이 외에 한미 정보 협력, 군수지원, 해상 선박 호위 임무 수행도 고려해야 할 것임.

- 넷째, 미군과 협력하여 북한의 국지적 도발을 견제해야 함. 미중 군사충돌이 격화되거나 장기화 될 경우 우리는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수준을 높이는 전략적 결정을 해야 하고, 이것은 일정한 수준의 동맹 연루를 의미하는 것임. 또한 미중 군사충돌이 격화되는 경우, 미 해군 전함들의 작전을 위한 호위 임무를 한국이 분담하거나, 중국의 북해 함대가 남하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해상작전에 동참할 것을 요청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임. 특히 이 상황에서는 북한의 도발 및 국지분쟁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한국과 북한은 각각 한·미 동맹과 중·북 조약에 얽여 있기 때문에, 대만해협 긴장 고조 및 양안 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이는 미·중 충돌 상황으로 연결되고 결국 한반도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측면에서, 2021년 5월과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2022년 12월 28일 우리 정부가 발표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라고 표명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것임.

## 질문

- 최근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정우택 국회부의장, 조경태 한-대만 의원 친선협회장, 국민의 힘 이달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28일부터 31일까지 대만을 방문한 것은 ……
  - ① 하나의 중국 정책을 부정하는 것인데 중국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 ② 정치적 행동과 외교적 행동이 서로 다른 결과를 생산할 것인데 대만과 단교 시와 같은 분명한 대중 정책의 원칙적 방향이 있어야지 정권의 부침에 따라 외교관계가 변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 ③ 한-중 관계가 정치적 이슈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 ④ 한-중 관계도 한-대만 관계도 하인리히 법칙을 고려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